

國務調整室
政策調整事例 第1輯

政策調整事例 綜合

- 98. 3月부터 99. 8月까지 -

99. 9



國務調整室

政 策 調 整 事 例 綜 合

－ 98. 3月부터 99. 8월까지 －

99. 9

國 務 調 整 室

○ 이 資料는 國民의 政府가 出帆하여 斷行된
政府組織改編에 따라

次官級 機關이던 行政調整室이 長官級 機關인
「國務調整室」로 擴大改編된 98.2月28日 以後부터
99.8月까지 사이에

國務調整室이 主管이 되어 主要政策을 調整한
事例를 綜合한 것임.

○ 앞으로는 每年 이와같이 調整事例를
綜合・整理하여 國務調整室의 業務實績으로
管理하면서 對外 弘報資料로 活用할 方針임.

目 次

I. 強化된 國務調整室의 政策調整機能

□ 國務調整室의 機能擴大.....	9
□ 國務調整室의 政策調整機能 強化.....	10
□ 強化된 政策調整事例 例示.....	11
□ 政策調整事例集 發刊.....	16

II. 政策調整事例 綜合

□ 總括調整官室

< 企 劃 >

○ 「새천년 맞이사업」추진체계 구축.....	21
○ 월드컵 경기장 수익시설 설치문제.....	23
○ 월드컵 경기장 진입도로 국고지원 문제.....	25
○ 월드컵 옥외광고 허용문제.....	26

< 外交安保 >

○ Jasmine 9호 선박 도주사건 관련 조정.....	27
○ 고위공직자 공무국외여행 허가절차 개선.....	28
○ 군문화 EXPO 개최문제 조정.....	29
○ 북한주민 사체처리절차 확립.....	30
○ 해외주재관 및 무관 감축 조정.....	31
○ 사할린 한인 요양원 건립관련 조정.....	32
○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준비지원.....	33
○ 국무총리 방일관련 중점추진과제 확정.....	34
○ 2001년 하계U대회 유치신청 철회.....	35

< 自治行政 >

○ 시·도지사 건의사항 조정 처리.....	36
○ 거창사건 등 관련자 위령사업 추진.....	37
○ 공직사회 활성화대책 추진.....	38
○ 정부공문서 한자병용정책 조정.....	39
○ 유해업소 등 미성년자 보호대책 추진.....	40
○ 구공보처 소관의 비영리법인 주무부처 지정 조정.....	41
○ 관보보급 및 발행제도 개선 추진.....	42
○ 수해방지종합개선대책 수립.....	43
○ 수해 관련 민원제기사항 등 조정.....	44
○ 연천댐 수해방지대책 추진.....	50
○ 어린이 등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51
○ 위험물질운송 안전대책 추진.....	52

< 次官會議・國務會議案件 調整 >

○ 공무원 수당삭감을 퇴직공무원의 연금에 연동시킬지 여부 조정.....	53
○ 노인복지사업비의 자치단체간 부담비율 근거규정 조정.....	54
○ 시내버스 운임·요금의 신고제 전환 관련.....	55
○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시 가점부여 관련.....	56
○ 고용보험 적용확대 시기 조정.....	57
○ 농촌지도소 복수직급 문제 조정.....	58
○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체계 조정.....	59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소관 조정.....	60
○ 법령위반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 상향조정.....	61
○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기준 제정 소관 조정.....	62
○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소위원회 기능 조정.....	63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 관련 조정.....	64
○ 유해화학물질 관련 협약의 국내이행사항 소관부처 조정.....	65
○ 긴급감청시 검사의 사전지휘 여부 조정.....	66
○ 관용차량 관리방안 조정.....	67

○ 유스호스텔 신축시 일정넓이 도로확보요건 조정.....	68
○ 외국 방송프로그램의 수입승인 기준 조정.....	69
○ 「2010 해양 EXPO」 개최예정지 조정.....	70
○ 정부조직개편 관련 조정.....	71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능활성화 방안 조정.....	72
○ 정부부처 직제개정안관련 쟁점사항 조정.....	73
○ 공중보건의 수당지급 여부 관련 조정.....	74

□ 經濟調整官室

< 財經金融 >

○ 통상업무 추진체계 조정.....	77
○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설치계획 조정.....	79
○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계획 조정.....	81
○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 유치 조정.....	83
○ 한·EU 화장품 관련 통상현안 조정.....	85
○ 수입의약품 보험약가 등재가 조정.....	87
○ 고용안정증권 판매촉진대책 관련 조정.....	89
○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신용감독규정 조정.....	91
○ 동광석·조동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관련 조정.....	93
○ 예대금리차 관련 조정.....	95
○ 우체국의 대출업무 취급관련 조정.....	97

< 産 業 >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관련 제도개선.....	99
○ 엑스포과학공원 대전광역시 무상이양.....	102
○ 나훗뜨까 한·러 공단조성.....	103
○ KTX-2사업 정부지원분담예산 편성방안.....	104

○ F-16전투기 추가생산 사업추진.....	105
○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제정.....	106
○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임대연장.....	107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108
○ 중계유선방송 채널수 제한 조정.....	111
○ 전자화폐와 통합교통카드의 연계개발.....	113
○ 한전 전주 공동리용 방안.....	116
○ Y2K문제 대책추진.....	117
○ 상암동 월드컵주경기장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	120
○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관련.....	121
○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업무 조정.....	123
○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	125
○ 중·대형 컴퓨터 중복개발 방지.....	127

< 農水産建設 >

○ 경부고속철도 사업계획 조정관련.....	128
○ 시화간석지 관리대책 조정.....	129
○ 자동차 LPG 사용제한의 법적근거 마련.....	130
○ 여천공단 주변마을 이주대책 추진.....	131
○ 외국인 토지취득절차 개선.....	132
○ 농가부채대책 조정.....	133

□ 社會文化調整官室

< 福 祉 >

○ 도시노숙자 보호대책 지원·조정.....	137
○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및 업종구분 관련 조정.....	138
○ 안마사생계지원대책 관련 조정.....	140

○ 아·태 장애인경기대회 관련 조정.....	141
○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관련 조정.....	142
○ 의료기관 신용카드사용 관련 조정.....	146
○ 잉여식품활성화지원·조정.....	151
○ 「암센터」 운영방안 관련 조정.....	153
○ 「건전가정의례준칙안」성년례 적용대상연령 조정.....	156
○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문제 조정.....	159
○ 자영자 소득과약 방안 마련.....	162
○ 국민연금 보완대책 추진.....	166

< 敎育文化 >

○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선정·지원.....	168
○ 관광출국납부금제도 개선.....	169
○ 출판업계 지원 대책.....	170
○ 98 경주 세계문화 EXPO지원 대책.....	171
○ 골프장 숙박시설 허용 및 취득세 중과 완화.....	172
○ 관광산업 진흥 대책 추진.....	173
○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골프 승마경기장 건설지원.....	174
○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추진 조정.....	175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발전방안 수립 조정.....	177
○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 개정추진 조정.....	179

< 失業對策 >

○ 고용안정채권 판매촉진 관련 조정.....	180
○ 국외취업 활성화 추진 관련 조정.....	181
○ 사회복지업무 인력지원문제 조정.....	182
○ 고용유지 지원제도 확충 조정.....	183
○ 국민연금 확대실시에 따른 공공근로인력 지원 관련 조정.....	184
○ 동절기 일용직 대책 및 일일고용센터 운영 관련 조정.....	185

○ 여성가장 창업지원 추가재원 확보 관련 조정.....	186
○ 생활보호자 D/B 조기구축 관련 조정.....	187
○ 하반기 실업대책사업 추진방향 조정.....	188
○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 임금단가 조정.....	189
○ 공공근로 대상자 선발기준·방법 개선관련 조정.....	190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관련 조정.....	191
○ 한시생활보호사업 추진방향 조정.....	192
○ 정부지원 인턴제 추진방향 조정.....	193
○ 직업훈련사업 활성화방안 조정.....	194

□ 水質改善企劃團

○ 하수관거 지방양여금사업 지원비율 조정.....	197
○ 축산분뇨 처리 및 자원화대책.....	198
○ 팔당호등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관리특별대책 수립.....	200
○ 팔당특별대책 재원조달방안.....	203
○ “환경기술개발및조정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개정 관련.....	205
○ 용담댐 수질보전 및 비용부담 방안.....	207
○ 연안관리법 제정관련.....	209
○ 화옹호 수질보전 및 비용부담 방안.....	211
○ 압축천연가스(CNG)버스운행 및 충전소 설치.....	213
○ 새만금 간척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단 구성·운영.....	215
○ 상·하수도료금 현실화 추진.....	217
○ 물관리정보화 추진대책.....	218
○ 영월댐 건설 타당성 종합검토를 위한 공동조사단 구성·운영.....	220

I . 強化된 國務調整室의 政策調整 機能

I. 強化된 國務調整室의 政策調整 機能

□ 國務調整室의 機能 擴大

-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심사평가 및 규제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임무를 수행(정부조직법 제20조)
 - 국무조정실은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 밑에 관리관인 조정관 5명과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 1명이 있으며, 그 밑에 심의관 14명이 업무를 분장
 - △ 총괄조정관은 실업무 총괄과 국무회의·차관회의 운영 보좌, 통일·외교·안보 관련부처, 행정자치 및 안전관련 업무 분장
 - △ 경제조정관은 재정·경제, 금융, 산업·과학, 정보통신, 농림해양수산, 건설교통 관련업무
 - △ 사회문화조정관은 보건복지, 노동(실업대책), 여성, 교육·문화, 보훈, 청소년 관련업무
 - △ 심사평가조정관은 정부정책의 심사분석 평가, 공직기강 관련업무
 - △ 규제개혁조정관은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 △ 수질개선기획단부단장은 수질개선 및 환경 관련업무를 각각 분장
 - 국무조정실은 73년2월1일 차관급 기관인 「행정조정실」로 설립되었으며, 98년2월28일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단행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장관급 기관인 「국무조정실」로 개편
- ⇒ 이에 따라 각부처 업무에 대한 정책조정기능과 심사평가기능이 강화되었으며, 규제개혁기능이 신설됨.

□ 國務調整室의 政策調整機能 強化

- 장관급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증대 -

- 장관급 의장이 차관회의를 주재함으로써 차관회의가 실질적 심의·조정기구로 운영됨.
-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각종위원회의 실무위원장으로, 또한 주요 국정사항에 대한 대책회의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장 주관하에 주요정책을 사전 조율·조정
 - * 국무조정실장이 주재·참석하는 위원회(회의) 현황 : 총 63개
 -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위원회(회의) 15개
 -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위원회(회의) 48개
 - △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 : 3개
 - △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 : 31개
 - △ 기타 고위당정회의 등 각종회의 : 14개
- 규제개혁, 심사평가, 수질개선, Y2K대책, 실업대책 등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조정력을 발휘
- 특히, 국무조정실장이 경제정책조정회의와 국가안보상임위원회 참석 등 경제 관련업무와 통일·외교·안보 관련업무의 조정까지 참여하게 됨으로써 그 역할과 임무가 광범해지고 막중해졌음.
- 기타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현안사항에 대해 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함으로써 실질적 조정력이 크게 강화되었음.

□ 強化된 政策調整事例 例示

① 각종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정책조정 강화

-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등 각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정부 주요정책을 조율하고 조정

*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 : 총31개(99.9월 현재)
- 98년 41회, 99.1~9월 총 33회 회의 개최(월평균 3회이상)

< 사례예시 >

- △ 고용안정증권 판매촉진대책 조정
(98.4.9, 국무조정실장 주재 실업대책추진위원회)
- △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제도 개선 조정
(98.5.21, 국무조정실장 주재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
- △ 자유무역협정(FIA) 추진계획 조정
(98.11.5, 국무총리 주재 대외경제조정위원회)
- △ 팔당호 특별대책 재원조달 방안
(98.11.20, 국무총리주재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 △ F-16 전투기 추가생산 사업 조정
(99.4.22, 국무총리주재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 △ 제주도 종합개발 2000년 투자계획 조정
(99.5.25,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주도 종합개발지원위원회)
- △ 중기실업대책 확정
(99.7.23, 국무총리주재 실업대책위원회)

② 차관회의의 심의·조정기능 강화

- 국무조정실장이 장관급으로 차관회의를 주재함으로써 회의 운영에 대한 장악력이 강화되어 국무회의 전심기구로서의 역할을 그 어느때보다 충실하게 수행
- 차관회의에서 부처간 이견사항 등을 심층 토의·조정하고 이견이 특히 심한 사항은 조건부 의결 또는 보류하여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조정을 실시
-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의안을 국무회의에 즉석 상정하는 사례를 지양, 국무회의에서의 논의 충실화 도모

⇒ 국무회의가 명실상부한 국정최고의 심의·조정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차관회의에서 충분한 검토·조정을 통해 뒷받침

< 사례예시 >

- △ 공무원수당삭감의 퇴직공무원 연금 연동 여부 조정
(98.5.18, 일반행정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담당관회의)
- △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기준 제정 소관 조정
(98.11.11,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 △ 긴급감청시 검사의 사전지휘 여부 조정
(98.12.5, 총괄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급회의)
- △ 유스호스텔 신축시 일정넓이 도로 확보요건 조정
(99.4.19, 총괄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
- △ 외국방송프로그램의 수입승인 기준 조정
(99.5.28, 외교안보·의정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담당관회의)
- △ 「2010 해양 EXPO」 개최 예정지 조정
(99.6.12,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③ 능동적인 정책조정역할 수행

- 종전에는 부처의 정책조정요청이 있거나 언론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있는 후,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가시화되었을 때 비로서 조정에 임하는 사후적·소극적 조정이 많았으나 국무조정실 기능강화 이후에는 국가주요정책과제에 대해 능동적 자세로 정책의 문제점이나 부처간 이견사항을 가능한 사전에 파악하여 적극 조정에 나섬으로써 정책조정이 보다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 사례예시 >

- △ 출판업계 지원대책 마련
(98.3.16,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차관회의)
- △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 설치계획 조정
(98.5.9, 경제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
- △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시 가점부여 문제 조정
(98.8.7,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
- △ 잉여식품활성화 지원·조정
(98.9.14, 복지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담당관회의)
- △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운행 및 충전소 설치문제 조정
(99.1.22,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 △ 국민연금 확대실시에 따른 공공근로인력 지원방안 확정
(99.2.26, 총리주재 실업대책위원회)
- △ 위험물질운송 안전대책 강구
(99.3.11, 자치행정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담당관회의)

④ 긴급 현안과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

- 긴급한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어 시급히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당면과제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주도하에 관계부처간 협의·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

< 사례예시 >

- △ 경부고속철도 사업계획 재검토 필요제기에 대한 조정
(98.4.8,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
- △ 통상업무 추진체계 조정
(98.4.22,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
- △ 도시노숙자보호대책 지원·조정
(98.6.15, 사회문화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급회의)
- △ 국민연금 확대실시 보완대책 마련
(99.5.21,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
- △ 여천공단 주변마을 이주대책 추진
(99.6.11,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 △ 어린이 등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99.7.10, 총괄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
- △ 수해대책 종합·조정
(99.8.2,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
- △ Jasmine 9호 선박도주사건 관련 조정
(99.8.19, 8.28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 △ 영월댐 건설 타당성 공동조사단 조성·운영 추진
(99.8.26, 국무조정실장 주재 물관리정책실무위원회)

⑤ 범정부적 행정현안에 대해 체계적·종합적 대처

-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행정현안중 범정부 차원에서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처

- △ 수질개선대책(수질개선기획단)

- △ 규제개혁(규제개혁조정관실)

- △ 실업대책(실업대책기획평가단)

- △ 부패방지대책(부패방지기획단)

- △ 월드컵대회 지원(월드컵대회 정부지원조정반)

- △ 컴퓨터 2000년문제 대책(Y2K대책협의회)

- △ 기후변화협약대응(기후변화협약 실무대책회의) 등

□ 政策調整事例輯 發刊

-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은 각부처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보고청취, 각급 실무계층간의 다양한 형식의 협의나 회의,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와 차관회의 및 관계차관회의,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와 관계장관회의, 국무회의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음.
- 따라서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직·간접적으로 조정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하겠음.
- 여기에 종합된 조정사례는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조정실로 확대 개편된 이후 최근까지(98.2.28~99.8)에 추진한 정책조정사례중
 - 비교적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종합한 것이며
 - 다만, 별도의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는 「규제개혁」 분야와 심사평가보고회를 개최하는 「심사평가」 분야는 제외하였음.
- 앞으로는 매년 이와같이 조정사례를 종합·정리하여 「정책조정사례집」으로 발간, 관계부처간 업무협조는 물론 조정결과의 사후관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임.

II. 政策調整事例 綜合

☐ 總括調整官室 ☐

☐ 經濟調整官室 ☐

☐ 社會文化調整官室 ☐

☐ 水質改善企劃團 ☐

□ 總括調整官室 □

「새 천년 맞이事業」推進體系 構築

□ 推進背景

-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두고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문화비전 2000사업」을 준비하여 왔으나 경제·과학·기술 등 전분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까지 참여하는 범국민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 ⇒ 온국민이 함께 「새로운 천년」을 축하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민족이 화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발굴·추진할 필요성 제기

□ 爭點事項

- 추진체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 제시
 - △ 대통령소속의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 △ 「제2건국위원회」에서 전담 추진
 - △ 기존의 추진체제(문화비전 2000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 등

□ 調整經過

- 99. 2. 4 국무조정실장 주재, 1차 관계차관회의
- 99. 3.13 국무조정실장 주재, 2차 관계차관회의

□ 調整結果

- 대통령 소속의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동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지원기구로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계부처협의회 설치
 - 「민간위원회」의 사무기구로 「새천년 준비기획단」 설치·운영
- ⇒ 동 추진업무를 대통령비서실(정책기획)에서 주관하여 추진

□ 其他 特記事項

- 「새천년준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6206호)이 제정되었으며
동 규정에 따라 「새천년준비위원회」 발족(99.3.27)
 - 위원장 포함 위원20명(위원장:이어령 교수)
 - * 동위원회에서 「새천년사업」을 마련, 발표(99.6.15)

월드컵 競技場 進入道路 國庫支援 問題 調整

□ 推進背景

- 월드컵 개최 7개도시가 진입도로 등 시관내 도로의 정비·확충을 추진하면서 정부에 12개 사업 2,919억원의 국고지원 요청
- 개최도시들이 경기장 건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게 됨에 따라 경기장 진입도로 신설 등에 따른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진입도로의 일부 국고지원 필요성 대두

□ 爭點事項

- 기획예산처 : 정책의 신뢰성·일관성 측면에서 국고 직접지원은 곤란하며, 일부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 융자지원은 검토 가능
- 문화관광부 : 경기장 건설비를 지원받지 않는 5개도시의 대회 관련도로 확충비 지원 필요

□ 調整經過

- 99. 6. 3,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99. 6.10,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

□ 調整結果

- 경기장 건설비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주와 서귀포시 위주로 지원하되, 월드컵대회와 직접 관련된 도로에 한해 지원기로 함.
 - 전주시의 고속도로-경기장간 진입도로 및 서귀포시의 국도 12호는 50% 국고지원
 - 서귀포의 국도 11호는 전액 국고지원

월드컵競技場 收益施設 設置問題 調整

□ 推進背景

- 개발제한구역 및 체육공원안에 건립되는 월드컵 및 아시아 대회 경기장의 활용도 제고와 사후관리비용 충당을 위해 판매 시설, 위락시설 등 각종 수익시설을 설치·추진할 필요성 대두
- ※ 개발제한구역 및 체육공원안에 건립되는 경기장 현황
 - 월드컵경기장 : 대구, 울산, 대전, 전주(10개 경기장중 4개)
 - 아시아대회체육관 : 부산 금정, 기장, 강서(35개 경기장중 5개)

□ 爭點事項

- 건교부 : 개발제한구역 및 체육공원의 지정목적상 대형할인 매장, 쇼핑몰 등 대형판매시설과 숙박시설 등은 허용 곤란
- 문화부 및 개최도시 : 경기장이 대회 종료후에도 유희화되지 않고 시민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장내에 수익시설 설치 필요

□ 調整經過

- 99. 6. 3,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99. 6.10,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월드컵 및 아시아대회 경기장건설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은 물론 대회후 시설유지 관리에도 상당한 재정부담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그 활용성을 극대화하고자 개최도시가 설치하고자 하는 수익시설중 골프연습장, 유스호스텔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을 허용기로 함.
- 다만, 시설은 경기장시설 내부 또는 주차장 지하에만 설치토록 제한

□ 其他 特記事項

- 조정결과에 따른 관계법령(도시계획법 시행규칙 및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0월 공포시행 예정

월드컵 屋外廣告 許容問題 調整

□ 推進背景

- 99.1 월드컵조직위는 월드컵 축구대회의 홍보, 대회 준비·운영 소요자금 조달 및 FIFA에서 요구하는 광고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사업 허용을 행정자치부에 요구

□ 爭點事項

- 행정자치부 : 88올림픽 이후 옥외광고 난립과 이에 따른 도시미관 훼손을 이유로 더 이상의 옥외광고 허용은 곤란
- 아시아대회조직위 : 옥외광고사업에 경쟁적 우위에 있는 월드컵이 가세할 경우 아시아 조직위의 광고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반대

□ 調整經過

- 99. 6. 3,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99. 6.10,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

□ 調整結果

- 특례광고를 허용한 전례가 있어 이를 허용하지 않을 명분이 미약하고, 소요자금 조달 및 FIFA에서 요구하는 광고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월드컵조직위의 옥외광고를 허용기로 함.

□ 其他 特記事項

- 금년 정기국회에서 월드컵 옥외광고를 허용하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을 개정 예정
 -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광고종류와 설치장소는 양대회 조직위원회가 협의·조정

Jasmine 9號 船舶 逃走事件 關聯 調整

□ 推進背景

- '98. 6 온두라스 선적 상기 선박이 키리바시 공화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불법어로 혐의로 억류 기소되자
- '99. 2 동 선박관리 한국내 대리인 이정우가 키리바시에 가서 동국 경찰 1명을 태운채 동 선박을 불법탈취·도주하여 '99. 3 부산에 입항하는 사건이 발생
- 키리바시측은 범죄자 처벌과 선박송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바,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본건에 대한 정부방침 수립이 지연

□ 爭點事項

- 외교부 : 불법탈취 선박이므로 키리바시측에 원상회복 시켜야 함.
- 해수부·법무부 : 국내법상 선박을 키리바시측에 인도할 의무가 없음.

□ 調整經過

- '99.8.19 및 8.28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차에 걸쳐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제반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정부방침을 결정하였으며, 각 부처에 필요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시(세부내용 년말까지 대외비)

高位公職者 公務國外旅行 許可節次 改善

□ 推進背景

- 장·차관급 고위공직자가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부처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허가를 득하는 절차를 거침. (차관급은 국무총리 전결)
- 이러한 허가절차에 통상 10일 정도 소요되는데, 종래 해당부처에서는 여행 출발에 임박해서 허가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음.
- 또한 공무국외여행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귀국연기 등 여행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허가변경 절차 규정이 없었음.

□ 調整經過

- '99.3.16 당실은 외교통상부와 협의하여 개선방향을 정함.

□ 調整結果

- 허가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해당부처에서는 출국예정 10일 이전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허가제청을 요청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직접 구두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구두허가시 서면으로 사후보고)

□ 其他 特記事項

- 상기 내용을 행정자치부 소관 「공무국외여행규정」(대통령령) 개정령에 포함시킴. ('99.7.29 시행)

軍文化 EXPO 開催問題 調整

□ 推進背景

- 충남도는 '98.10월 군문화 EXPO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여, '99. 1~3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
- 행사주관기관(공동주최문제), 충남도와 중앙정부간의 역할분담 등 추진체계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군문화 EXPO 기본구상안(충남도)

- 시 기 : 2001.10.1~10.31(1개월간)
- 장 소 : 충청남도 계룡대 일원(약 30~50만평)
- 행사규모 : 240억원 소요, 예상관람객 200여만명
- 주요행사 : 3군 축하 퍼레이드, 군복패션쇼, 국제 군영화제 등

□ 爭點事項

- 충남도 : 국방부 · 문화관광부 · 충남도 공동주관으로 개최, 국가예산 지원, 정부지원위원회 구성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지원 요청
- 국방부 : 인력 · 장비 등은 최대한 지원 용의, 그 이외에는 충남도에서 전담
- 문화부 : 행사의 해외홍보는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지원, 문광부와 공동개최는 반대

□ 調整經過

- '99. 3.20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99. 3.22 당실에서 행정자치부 · 예산청 등을 포함하여 관계부처 의견수렴

□ 調整結果

- 대부분의 관계부처가 동 사업에 대해 부정적 또는 미온적인 점, 국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차원의 지원 불가 입장 정립
- 다만, 동 사업내용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6.25 50주년 기념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충남도와 협의하여 검토 · 추진토록 조치('99.4.21)

北韓住民 死體處理節次 確立

□ 推進背景

- 종래 북한주민의 사체가 우리지역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사체 처리와 관련한 주관부처, 처리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한 정부 지침이 없어 사안별·기관별 산발적인 처리로 업무의 일관성 결여

□ 調整經過

- '98.10.23 국가안보회의 사무처에서 당실에 북한주민 사체처리 관련지침 제정 검토 요청
- '98.12.17 당실에서 북한주민 사체처리체계 등 관련내용을 검토 하여 동 내용을 통일부에 통보, 지침 제정 추진
- '99. 1~2 통일부에서 지침(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 ※ '99.1.14, 1.28 통일부 인도지원국장 주재 회의에 당실 실무자 참석

□ 調整結果

- 북한주민 사체처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정('99. 4. 2)
 - 북한주민 사체발견시 「통합방위지침」에 의한 합동정보신문조가 사체를 조사
 - 북한 민간인 사체의 경우 통일부가, 북한 군인이나 정전협정 위반사건과 관련된 사체는 국방부가 주관 처리
 - 북한주민 사체는 북측에 통보 인수토록 하되 북한이 인수를 거부하고 남한내 연고자가 없을 경우 화장하여 안장
 - 사체의 처리 및 관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통일부장관은 각종 자료 및 기록을 종합 관리

海外駐在官 및 武官 減縮 調整

□ 推進背景

-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에서 재외공관 주재관 200명 (특정직·공안직 38명 제외)중 50명 감축결정('98. 2)
- 외교통상부에서 시안을 작성, 국무조정실에 조정요청('98. 5)
 - * 해외주재 국방무관에 대하여는 당실과 협의후 국방부에서 조정안 마련, 보고

□ 爭點事項

- 문화·홍보관, 재무관, 상무관 등 각 주재관에 대해 일률적으로 감축기준을 적용하는 등 타당성과 합리성 부족

□ 調整經過

- 당실에서 감축원칙과 기준을 면밀히 설정 및 조정하여 국무총리 및 대통령께 보고(6. 1)
- 제28회 국무회의('98.6.23)에서 「외교통상부와 그 직제중개정령안」 상정·의결

□ 調整(減縮)結果

- 해외주재관 238명중 공안직·특정직 38명을 제외한 200명중 25%인 50명 감축('98년, '99년 각 25명 감축)
 - 특히, 상위직급을 우선감축(50명중 국장급이상 26명)
 - * 해외주재 국방무관에 대하여는 일반직의 총감축비율에 상당하는 인원을 감축·조정

사할린 韓人 療養院 建立關聯 調整

□ 推進背景

- '96.12 제2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사할린 한인 요양원 건립방침 확정
- '98.1~3월 한적, 요양병원 건축허가를 득하여 요양원 건립 착공
 - * 한적소유 부지가 의료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사회복지시설 건축허가가 나지 않자 건축물 용도를 요양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득함.
- '98.3~4월 한적,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에 국고보조금 신청
- '99. 3 개원식 개최

□ 爭點事項

-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는 동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므로 법령상 국고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의견을 한적에 통보

□ 調整經過

- '98. 6. 18 관계부처 회의개최

□ 調整結果

- 인천시가 최단시일내에 한적 부지중 사할린 한인 요양원 부지만을 분할,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이에 따라 요양원 시설운영비가 국고보조되도록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가 조치토록 조정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 확보

第3次 아시아·유럽 頂上會議 準備支援

□ 推進背景

- 오는 2000.10.20(금)~10.21(토)간 서울에서 ASEM정상회의가 개최되며, 참가국은 아시아 10개국, EU 회원국 15개국 및 EU집행위원회 등 26명의 정상과 약3천여명의 대표단이 회의참석 예정
- 정상회의가 1년반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준비업무 본격화를 위해 준비기획단 규정개정 및 기획단 인원보강 등 관련 현안 사항 조정 필요

□ 爭點事項

- 관계부처 실·국장급으로 하는 ASEM실무조정회의 설치운영과 공무원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준비기획단 규정개정 및 그에 따른 인원 충원

□ 調整經過

- '99.4.21(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ASEM준비위원회 개최

□ 調整結果 및 後續措置

- 준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및 준비기획단 규정(총리훈령) 개정 등 조치
- 준비기획단 규정개정에 따른 인력충원 관련, 행정자치부에 지시하여 필요조치 진행중

國務總理 訪日關聯 重點推進課題 確定

☐ 推進背景

- 99.9.1-5간 국무총리의 공식방일예정과 관련,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정부부처간 입장 조율 필요성 대두

☐ 爭點事項

-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문제, 2002년 월드컵관련,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등 우리측 중점추진사안과 대일문화 개방 등 일측 제기 예상사안

☐ 調整經過

- '99. 8. 23(월), 국무총리비서실장 주재로 6개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상기 주요쟁점사항 관련, 회의참석 모든 부처간 의견 조율하여 우리정부 입장 확정

2001年 夏季U大會 誘致申請 撤回

□ 推進背景

- '97. 1.28 문화관광부, 대구시의 2001년 하계U대회 유치를 승인
- '98. 4.30 대구시 업무보고시 대통령께서 재검토 지시
 - 현 경제사정을 감안, 유치문제를 재검토할 것
- '98. 7. 2 문화관광부, 국무조정실에 대회 유치방침 재검토·조정 요청

□ 爭點事項

- 대구시는 대회개최를 적극 희망
- 기획예산위, 예산청,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및 안기부는 대회 개최 철회 내지 상당기간 연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

□ 調整結果

- 2001년 하계U대회 유치신청을 철회토록 조치
 - ※ 대구시가 2001년 하계U대회와 2002년 월드컵대회를 함께 개최할 경우 대구시가 부담할 예산이 5,000여억원으로 추산되고, 현재의 경기불황으로 민자유치도 곤란한 실정임을 감안
- 대구시는 어려운 국가경제가 충분히 회복된 이후 하계U대회 유치 재추진

□ 其他 特記事項

- '98. 8.21 문화관광부, 대한올림픽위원회 및 대구시에 2001년 하계U대회 유치승인 취소 통보
- '98. 9 대한올림픽위원회,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 대회 유치신청 철회

市・道知事 建議事項 調整 處理

□ 推進背景

- 자치단체에서 중앙에 개선을 요청해 오고 있는 사항중 개선되지 않거나 지체되고 있는 사항중
 - '98.7.8, 대통령주재 시・도지사 오찬간담회시 개선 건의(27개과제)
- 건의과제(27개) 소관부처에 지방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정을 통해 지방의 애로를 해결하여 발전적인 자치환경 조성

□ 調整經過

- '98. 7. 9 시・도지사 건의사항을 소관조정관실에 통보, 해당 부처의 검토의견에 대한 조정 추진
- '98. 7.28 건의과제에 대한 조정・검토결과를 시・도에 통보

□ 調整結果

- 총 27개 건의과제중 조정・검토결과
 - 수용 13, 일부수용 6, 장기검토 6, 수용불가 2개과제
 - ※ 수용불가(2) : 광주지하철 국고 증액지원, 계룡출장소 「특정시」설치
- 개선과제 주요내용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산자부)
 -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지정・육성제도」추진
 - 지방신용보증제도 보강
 - 지방신용보증제도 강화 특별법 제정(재경부, 산자부)
 - 아시안게임 승마장을 경마장으로 전환・발전 허용
 - 아시안게임 시설시 「경마장」으로 설치(문화부・건교부)

居昌事件 등 關聯者 慰靈事業 推進

□ 推進背景

- '96.1.6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공포되어 그동안 사실조사를 거쳐 사망자 및 유족을 결정하였으나('98.2.17)
- 명예회복사업(합동묘역사업)을 위한 용역비만 확보되고 계속 사업을 위한 사업비 미확보로 명예회복사업 추진 차질예상
 - * ㄱ 거창지역은 99년도 토지매입비 예산반영 필요('98: 용역비 2억원)
 - ㄴ 산청·함양지역은 2000년도 토지매입비 예산반영 필요('99: 용역비 2억원)

□ 爭點事項

- 기획예산처 : 구체적 사업계획없이 사업비 예산반영 곤란
- 행정자치부 : 사업의 계속성을 위해 실시설계 前이라도 사업비 확보

□ 調整結果

- 관계부처(행자부, 법무부, 국방부, 법제처) 회의를 개최하여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의 합동묘역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 우선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반영기로 하고 추후 실시설계결과를 보아가며 사업비를 조정·추진기로 결정
 - * ㄱ 거창 : 99년도 예비비 30억원 확보 요청('99.3.26 회의)
 - ㄴ 산청·함양 : 2000년도 본예산 20억원 계상 요청('99.8.2 회의)
- 기획예산처에서는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 99년 및 2000년도 예산에 반영

公職社會 活性化對策 推進

□ 推進背景

- 「국민의 정부」출범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정원감축, 정년단축, 보수삭감 등으로 공직사회의 사기저하에 따른 대책수립이 긴급요
- '99.3.25 행정자치부 국정개혁보고시 사기대책마련 계획보고, 이후 수차례 대통령께서 사기진작에 대한 관심 표명
- '99.5 청와대 정부조직개편관련 회의시 국무조정실이 주관하여 공무원사기대책을 수립토록 결정

□ 推進經過

-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에서 마련한 안을 토대로 보수, 복무,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분야별로 사기진작대책을 마련, 관계부처 등과 협의
- 관계부처 실무회의(1급) 개최 : '99.5.28
- 관계부처 차관회의('99.6.16) 및 장관회의('99.6.22)
-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99.6.24)
- 당정협의 2회 개최('99.7.1, 7.5)

□ 推進內容

- 연내 기본급 125%에 상응하는 가계안정비 지급
- 가족수당 인상(배우자 15천원→배우자30천원, 기타20천원) 및 당직비 현실화(5천원→1만원)
- 공무원 보수현실화 5개년계획 수립 추진 등

□ 其他 特記事項

- '99.7.7 해당부처에 시달, 그 실천방안을 마련·시행토록 조치

政府公文書 漢字並用政策 調整

□ 推進背景

- '99.2.9 국무회의시 문화관광부에서 한자병용의 필요성을 보고후 이를 확정하였으나
 - 추진방법상의 문제로 문화관광부와 입장과 행정자치부의 입장이 달라 추진 지연

□ 爭點事項

-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는 「한글전용에관한법률」 내용을 놓고
 - 행정자치부는 1970년 9월부터 「정부공문서규정」이 한글전용으로 바뀌었으므로 '다만, 얼마동안~있다'의 내용이 실효된 것으로 보아 법률을 먼저 개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 문화관광부는 「사무관리규정」만 개정하면 된다는 입장

□ 調整經過

- '99. 4.21 한자병용방안 추진에 따른 검토의견 총리께 보고
- '99. 4.22 법제처에 「한글전용에관한법률」해석 요청
- '99. 4.29 총괄조정관 주재로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 협의 조정

□ 調整結果

- 「사무관리규정」을 개정하여 '필요한 경우 괄호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도록' 조정

□ 其他 特記事項

- 조정결과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사무관리규정 개정('99.8.7)조치

有害業所 등 未成年者 保護對策 推進

□ 推進背景

- IMF관리체제 등 경제여건의 악화 영향으로 미성년자의 불법 고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 '98.6.5 규제개혁위원회가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제한을 8월부터 폐지키로 함에 따라 효과적인 청소년 보호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름

□ 推進經過

- '98. 6.18 청소년보호위원장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
- '98. 6.26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

□ 推進內容

-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설치·운영 및 지역단위 「청소년대책협의회」구성·운영
-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 수립
 - 미성년자 고용시 1차적발로 영업허가 취소 등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위반 벌칙 강화(1년이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 벌금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직업소개시「선불금 제공금지」및 「티켓다방」등에 대한 18세 미만자의 직업소개 금지
 -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매년 20~30개) 및 길거리 농구대·미니운동장 등 확대
 - 청소년관리 모범업소에 단속 유예,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등

□ 其他 特記事項

- '98. 6.27 후속조치사항 시달
- '98. 7.15 「중앙점검단」발족

舊公報處 所管의 非營利法人 主務部處 指定 調整

☐ 推進背景

- 1차 정부조직개편('98.2.8)으로 구공보처에 등록·관리되어온 66개 비영리법인의 주무부처를 행정자치부가 지정('98.5.25)하였으나
 - 해당부처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국무조정실에 조정 요청('98.6.29, 8.11)

☐ 爭點事項

- 행정자치부가 66개 법인을 관계부처에 주무부처로 지정하였으나, 이중 29개 법인에 대하여는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 調整經過

- 자치행정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조정회의 2회 개최('98.8.11, 9.6)

☐ 調整結果

- 당초 문화부, 교육부, 국가보훈처로 지정된 29개 법인을 통일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국가보훈처 등으로 소관 조정

☐ 其他 特記事項

- '98.9.7 해당부처에 조정내용을 통보, 행정자치부에서 조정결과에 의거 해당부처로 업무 이관

官報 普及 및 發行制度 改善 推進

□ 推進背景

- 「정부에서 관보를 쓸데없이 많이 발행하여 연간 1천만권 이상의 관보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총리께서 관보보급 및 발행 개선방안 마련토록 지시

□ 推進經過

- '98. 3.24 행정자치부에 관보개선방안 마련 조치
- '98. 4. 관보발행 실태 및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98. 4.20 총리님께 관보발행 및 보급개선방안 보고

□ 改善 主要內容

- 관보 1일 발행면수 최소화 → 즉시 조치
 - 게재요건 강화, 편집개선 및 여백활용 극대화
 - 자치단체는 시·도 공보에 게재 유도
- 관보 의무구독 범위 완화
 - 과단위·기관단위 → 각 기관의 실·국단위로 완화
- 관보내용을 컴퓨터 인터넷에 게재 → 즉시 조치
- 관보의 기능분리(관보·조달관보) 발행 추진

□ 其他 特記事項

- '99. 2. 8 관보규정개정으로 의무구독 완화 시행
- '99. 7. 1 일반관보와 조달관보로 분리발행 시행

水害防止綜合改善對策 樹立

□ 推進背景

- '98년 7.31~8.18기간중 전국적으로 극심한 수해발생
 - 총 15개 시도 184개 시군구에서 인명피해(324명 사망·실종) 및 재산피해(1조 2,478억원 상당)
- 수해상황대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어 수해대책 전반에 대한 개선·보완 필요성 대두
 - * 수방대책 개선방안 강구(대통령 지시, '98.8.29)

□ 推進經過

- '98.9~'99.2, 3개분야(사전예방 8, 상황대처 7, 복구수습 5) 20개 개선과제를 발굴, 관련부처별 협의 추진
 - '98.11 심의관주재 수방대책 예산관련 부처담당관회의 개최
 - '98.12.24 심의관주재 부처담당관회의 개최
 - '99. 1.16, 2. 6 수방대책(안) 부처 검토 회의

□ 推進結果

- 국무회의 보고(3.16) 및 관련부처 시행
- 20개 개선과제중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99예산 및 관계법령 개정시 반영 조치(15개과제)
-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거나 장기검토가 필요한 5과제는 2000년 이후 장기과제로 추진중
 - ※ 단계별 과제명 별첨

水害 關聯 民願提起事項 등 調整

□ 推進背景

- '99.7.31~8.4기간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67명의 인명과 1조490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피해가 극심하지만 보상근거가 없거나(낙과, 인삼 등) 보상기준이 미흡한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 * 과수·인삼 피해 현황
 - 과수피해(추정) : 32.2천ha(66.8천호)
 - 인삼피해(추정) : 179ha(1,750호)

□ 爭點事項

- 낙과·인삼 피해농가 지원방안
- 무허가 주택 보상비 지원여부
- 가축입식비 인상 등

□ 調整經過

- 8.10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 개최

□ 調整結果

- 낙과·인삼피해농가 지원
 - 특별경영자금 지원
 - '99년 추경('99.8)에 특별경영자금 1조4500억원(이차보전액 520억원)을 반영, 이중 4500억원(이차보전액 146억원)을 낙과·인삼피해에 우선 지원
 - 중장기 정책자금 2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지원규모 : 840억원(연간 이자감면액 42억원)
 - 중장기 저리자금 신규지원(30%이상 피해농가)
 - 지원규모 : 1,308억원(연리 5%, 3년거치 4년분할상환)

○ 가축보상액 현실화

- 가축입식비는 현실화하여 금번 복구계획에 반영(5.9~45.3%인상)

· 한우 : 송아지 700천원→889천원, 육성우 1,100천원→1,165천원

젖소 : 송아지 280천원→390천원, 육성우 750천원→1,090천원

돼지 : 자돈 47천원 → 62천원, 육성돈 115천원→139천원

*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 불필요

○ 무허가 주택에 대한 피해보상

- 무허가 주택에 대한 지원방안을 ‘복구규정개정안’에 포함반영
(8.10 국무회의)

· 무허가 주택도 적법하게 건축허가후 이·개축하는 경우 전파
기준 지원(2,700만원)

※ 반파 또는 침수주택도 이축 또는 개축 희망시 전파기준으로 지원(신설)

○ 수재의연금 사용방법 개선

- 의연금 사용범위를 이재민구호관련 비용에만 사용하고 복구
관련 비용은 국고로 지원토록 운영('99.8.12, 대책회의)

· 금번 복구계획 수립시부터 반영 계획

*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 불필요

< 붙임 > 課題別・部處別 措置事項

단 계 별	과 제 명	개 선 방 안	조치기관 (협조기관)	추진일정
사 전 예 방 단 계	① 기상관측장비 확충 및 현대화	○기상전용 Super Computer 구입 ○지상관측망 조밀화를 위한 AWS증설 ○기상레이더 증설 및 고층기상 관측망 보강 등	기상청(예산청)	'99~
	② 기상전문인력 확보	○예보분석 및 장비운영요원 확보 ○학사이상 기상전문인력 연차적 확보	기상청 (행정자치부, 예산청)	'99~2004
	③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리 개선	○건축법 개정 ○재해위험지구(구역)내 주택개량시 건축비 일부 지원(융자 60%, 자부담 40%)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예산청)	'99상반기
	④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2000년부터 사업비 증액 편성, 지원 확대	행정자치부 (예산청)	'99~
	⑤ 준용 및 소하천 정비사업지원 확대	○향후 지방재정발전대책협의시 준용 및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양여금 확대 지원여부 종합검토 ○수해상습지 준용하천 정비추진 ○준용하천을 포괄하는 수계치수 사업 확대	행정자치부, (예산청) 건설교통부 (예산청)	'99~
	⑥ 풍수해예방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연구용역 시행 - 시설물별 풍수해 설계기준 및 지침 작성 - 개발계획수립시 방재사전심의 제도 도입 - 우수유출억제를 위한 저류 및 침투시설 설치의무화 방안 강구	행정자치부 농림부, 건설교 통부, 해양수산부	'99~
	⑦ 풍수해보험제도 도입	○ 풍수해보험제도 도입	행정자치부	'99~2001

단계별	과제명	개선방안	조치기관 (협조기관)	추진일정
상 황 대 처 단 계	⑧ 국민안전의식고취 를 위한 방재홍보 강화	○ 초·중·고교학생에 대한 방재교육 강화 ○ 민방위대, 군·공무원 교육시 방재 교육 병행 실시 ○ 범시민 안전실천운동 전개 - 안실련, 경실련 등 시민단체 참여 유도 - 가두캠페인 등 실시 ○ SPOT방송용 방재프로그램 개발 -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보급 - 공익광고방송 실시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안전생활실천연합, 한국방재협회)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99상반기
	⑨ 재해대책본부 상황실 기능강화	○ 중앙, 지자체 재해대책본부에 통일된 전화번호 부여 ○ 재해발생 단계별 대처요령 등 SOP작성 활용 ○ 기상전문요원외 상시 파견근무 체제 유지 등 ○ 중앙·지자체간 초고속 방재통신망 구축 등 중·장기대책 추진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기상청)	'99~
	⑩ 구조구난지휘체계 확립	○ 현장지휘체계확립을 위한 통제관 교육 실시 ○ 긴급구조 현장지휘 통제훈련 실시 등 ○ 긴급구조 소요예산 지원('99자 치단체 예산반영)	행정자치부 (국방부, 경찰청)	'99
	⑪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	○ 지리산지역(3개지구) 경보시설 확대 설치 ○ 유명계곡 시설확대사업추진	행정자치부 (환경부)	'99~

단 계 별	과 제 명	개 선 방 안	조 차 기 관 (협조기관)	추 진 일 정
상 황 대 처 단 계	⑫ 국립공원 관리통제 기능 강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법경찰권 행사 확행, 벌칙 강화 등 단속 기능 강화 - 불법야영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대폭 강화 등(자연공원법 개정) ○현장인력보강 및 24시간 비상 근무조 편성.운영 - 지자체, 119구조대와 비상연락. 협조체제 유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방재 책임자로 추가 지정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	환경부 (법무부) 환경부 (기상청,지자체등) 행정자치부 (환경부)	'99상반기
	⑬ 군부대 「재해통제 본부(6119)」 운영 체계 개선	○권역별 재해통제본부 운영 ○재해통제본부 통신망 전국 단일 번호(6119)사용 - 민간전화 080-960-6119 - 군전화 부대국번 + 6119	국방부	기초치 ('99.2)
	⑭ 재해·재난방송 의무화	○방송법에 재해·재난방송의무화 규정 신설	문화관광부	'99상반기
	⑮ 재해경보방송 시스템 도입	○법적근거 마련(방송법) ○긴급경보방송시스템 도입방안 개발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	'99~

단 계 별	과 제 명	개 선 방 안	조치기관 (협조기관)	추진일정
복 구 수 습 단 계	⑯ 주택복구비 지원 현실화	○전과주택기준 현행 2,000만원을 2,700만원으로 증액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예산청)	'99상반기
	⑰ 농경지 피해복구 방법 개선	○피해조사 보고기간 연장(2→10일) ○피해신고 및 조사자 실명제 실시 ○복구비집행 투명성 확보 방안 강구	행정자치부 농 립 부	'99상반기
	⑱ 재해대책예비비 선집행 후정산제도 도입	○예산회계법 개정	예산청	기초치 ('99.2)
	⑲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예산전용권 부여	○「세출예산 전용권 위임범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관련 항목 추가	예산청	기초치 ('99.1)
	⑳ 재해구호 및 복구 절차 간소화	○지방재정법 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추가사항 통보	행정자치부	'99상반기

漣川댐 水害防止對策 推進

□ 推進背景

- 소수력 발전댐으로 건설('83.4)된 연천댐이 '96년 수해에 이어 금년 수해시 재차 붕괴됨으로서 막대한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불신 초래
- 연천댐은 현대건설에서 건설, 연천군이 관리청으로 되어 있으나 자치단체의 관리능력을 감안, 중앙정부차원의 근본적 안전대책 강구 필요

□ 爭點事項

- 댐관리 중앙행정기관 지정 및 댐존폐 등에 대한 방침 결정
 - 산업자원부 : 전기설비와 관련된 사항 허가기관
 - 건설교통부 : 치수 주관부처이며 하천법상 하천관리청의 감독기관

□ 調整經過

- '99. 8.10 국무조정실장 관계차관회의시 조속 처리 건의(행자부)
- '99. 8.20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개최

□ 調整結果

-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어 연천댐 존폐방침을 조기에 결정하고 행자부, 산자부 등 관련기관은 소관분야에 대해 협조
- ※ '99. 8 현재 건교부와 관련기관에서 안전대책 검토중

어린이 등 利用施設에 대한 安全對策 講究

□ 推進背景

- '99.6.30 화성 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고와 관련, '자구력이 부족한 어린이 등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 ※ 안전대책 강화 지시(6.30, 대통령 · 국무총리)

□ 爭點事項

- 자구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유아원,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강화
 - ※ 관련부처 : 행정자치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 調整經過

- 7. 3 심의관주재 관계부처 담당관회의 개최
- 7.10 총괄조정관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 개최
- 중앙행정기관 합동 청소년수련시설 표본점검 실시(7.6~7.17, 54개소)
 - * 지방자치단체는 7.1~7.30기간 소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28,229개소)
- 8.13 어린이등 이용시설 안전대책관련 심의관주재 부처과장회의

□ 調整結果

- 어린이등 이용시설 점검결과와 부처별 안전대책을 종합, 안전관리 강화대책 수립 추진중

危險物質運送 安全對策 推進

□ 推進背景

- '99.3.2 발생한 춘천유조차 전복사고(1명 사망, 경유 3톤 유출)를 계기로 각종 위험물질운송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 여론 확산
 - * '97년 위험물질 교통사고 현황
 - 169건 발생(18명사망, 277명부상), 재산피해 885백만원
- 위험물질운송이 개별법으로 관리됨에 따라 운송기준, 안전교육, 별칙규정 등의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조정 필요성 대두

□ 爭點事項

- 여러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위험물질관련규정을 통합하여 별도법 제정 또는 현행 개별법상 내용 보완 여부

□ 調整經過

- '99. 3.11 자치행정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과장회의 개최
 - 행정자치부, 농림부, 환경부 등 8개부처

□ 調整結果

- 현행 소관별 개별법을 타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소관별로 보완·개선
- 별도의 통합법 제정은 일부부처가 특수성을 고려하여 반대하고 있고 법기술상의 어려움(법제처) 등으로 현행 개별법 체계 유지
 - ※ 수질환경보전법 보완 개정('99.8 현재 법제처심사중)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에 위험물질운송차량(유해물, 농약, 유류 등)의 통행 제한

公務員 手當削減의 退職公務員年金 連動與否 調整

□ 推進背景

- 행정자치부가 제16회 차관회의(98.5.15)에 제출한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안」이 관계부처 이견으로 보류

□ 爭點事項

- 행자부·예산청 : 공무원보수와 연동된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삭감
- 국방부·노동부·문화부 : 현직 공무원의 고통분담
술선수범을 퇴직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곤란

□ 調整經過

- 98.5.18 일반행정심의회관 주재로 관계부처 과장급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금번 공무원 봉급삭감은 연말까지 한시적이며, 전년도 퇴직자보다 재직기간이 더 긴 금년도 퇴직자가 퇴직일시금을 적게 받는 모순이 있고, 퇴직연금 수급자의 집단민원 야기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 수당삭감은 퇴직공무원 연금에는 연동시키지 않기로 결론

老人福祉事業費의 自治團體間 負擔比率 根據規程 調整

□ 推進背景

- 복지부가 제18회 차관회의(98.5.28)에 제출한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서울시에서 이견제기

□ 爭點事項

- 서울시 : 노인복지사업비의 자치단체간 부담비율을 정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가 노인건강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되므로 비용부담비율을 시·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동 시행령에서 근거마련 요청
- 행자부·복지부 : 자치단체간 비용부담 문제는 동 시행령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 기준등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할 사안임

□ 調整經過

- 98.5.29 일반행정심의회관 주재로 관계부처 과장급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서울시가 제기한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은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에서 정할 사항이므로 금번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한 것으로 결론

市內버스 運賃・料金の 申告制 轉換 關聯

□ 推進背景

- 건교부가 제26회 국무회의(98.6.9)에 제출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에서 이견을 제기함에 따라 보류

□ 爭點事項

- 서울시 : 시내버스운임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게 되면 버스요금이 대폭적 인상이 예상되어 서민의 고통가중 우려
- 건교부 : 신고제를 실시하더라도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안에서 신고하여야 하므로 운임인상 우려는 없음

□ 調整經過

- 98.6.12 일반행정심의관 주재로 관계부처 과장급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신고제로 하더라도 시·도에 위임된 운임기준·요율로 가격통제가 가능하므로 운임인상 우려가 없으므로 신고제로 전환
- 서울시는 운임기준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토록 조정

除隊軍人에 대한 採用試驗時 加點附與 關聯

□ 推進背景

- 국가보훈처에서 제32회 국무회의(98.7.21)에 제출한 「제대군인 지원법시행령 개정안」이 관계부처 이견으로 보류

□ 爭點事項

- 여성특위 · 문화부 : 공무원 채용시험가점비율을 5%, 3%로 하는 것은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이 되며, 정부의 여성 공무원 확대방침에도 상반되고 헌법상 남녀평등원칙 위반 요소가 있음
- 행자부 · 국방부 · 보훈처 : 제대군인지원을 위한 법령에서 기존보다 수혜율을 낮추는 것은 법취지상 어렵고, 내년부터 여성공무원 채용비율을 20%로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여성에게 불리함이 없으며, 군에 대한 사기양양 차원에서 필요

□ 調整經過

- 98.7.24, 총괄조정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급 조정회의 개최
- 98.7.30,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98.8. 7,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 개최

□ 調整結果

- 현행대로 가점비율(5%, 3%)을 유지하되 여성채용목표비율 20%를 달성하게 되는 2000년도에 제대군인 가점부여 문제와 여성채용목표비율제를 종합 · 근본적으로 재검토기로 함

雇傭保險 適用擴大 時期 調整

□ 推進背景

- 노동부에서 제33회 국무회의(98.7.28)에 제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관계부처 이견으로 보류

□ 爭點事項

- 법무부·법제처 : 고용보험금 지급은 6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가능하나 98.10.1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면서 3개월 보험료분만 납부하고 99.1.1일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부적절
- 노동부 : 다른 적용대상자는 6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적용대상이 되나 98.10.1 확대자는 3개월간 특혜를 주는 것이며 6개월간을 모두 적용하면 고통이 있을 때 구제가 불가능함

□ 調整經過

- 98.7.31 일반행정심의회관 주재로 관계부처 과장급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98.10.1 확대자도 6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금을 수령(99.4.1일부터)할 수 있도록 결론

農村指導所 複數職級 問題 調整

□ 推進背景

- 행자부에서 제30회 차관회의(98.8.20)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농림부에서 이견 제기

□ 爭點事項

- 농림부 : 시·군 본청의 농정관련 조직과 농촌지도소가 통합하는 경우 본청 局과 지도소, 본청 課와 課로 통합시에 한정하여 복수직급화(일반직·지도직)하는 것을 명시해 줄 것을 요청
- 행자부 : 농업관련 조직의 통폐합 추진과정에서 관련직위의 복수직급화는 당연하며, 통합대상직위의 구체적인 복수직 부여 여부는 금번 개정안이 아닌 행자부 내부 지침에서 정하고 있음

□ 調整經過

- 98.8.22 일반행정심의관 주재로 관계부처 과장급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복수직급을 부여하는 경우를 시 또는 군 본청의 농업행정관련 局 또는 課의 기능과 지도소를 통폐합하는 경우로 명시하되,
 - 「행자부지침」운영시 局대 농촌지도소, 課대 課로 통폐합하는 경우에만 복수직급화를 할 수 있도록 조정

産業構造 高度化 推進體系 調整

□ 推進背景

- 산자부가 제36회 차관회의(98.10.1)에 제출한 「산업구조고도화 촉진법안」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이견 제시

□ 爭點事項

- 산업구조고도화 시책 등의 수립주체
- 산업협력협의체의 설치 필요성 등

□ 調整經過

- 98.10.7 일반행정심의회관 주재로 관계부처 과장급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관계부처 의견을 수용, 산자부장관이 산업구조고도화시책 수립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책을 강구하도록 조문수정
- 산업협력협의체 설치시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조문수정
- 산업기반기금의 사용범위에서 “산업구조고도화 심의회”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제외

農漁村 住居環境 改善事業 業務所管 調整

□ 推進背景

- 법제처가 행자부소관 법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동법의 주요내용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농림부로 일원화하는 문제 제기

□ 爭點事項

- 법제처·농림부 : 정부조직법 규정상 농어촌 문제의 주무부처는 농림부이므로 동 사업도 농림부로 일원화 필요
- 행자부 : 동 사업은 자치단체 고유업무로 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으로 행자부 주도하에 지원·추진하고 있음

□ 調整經過

- 98.10.12 일반행정심의관 주재로 관계부처 과장급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동 사업의 소관일원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이견이 없으나, 관계법령 및 사업내용의 복잡다기성으로 단기간에 결론짓기는 곤란한 사안이므로
- 현재 행자부가 추진중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일원화하기로 조정

法令違反 航空社에 대한 課徵金 上向調整 與否

□ 推進背景

- 건교부가 제49회 국무회의(98.10.27)에 제출한 「항공법 개정안」이 법제처 등 관계부처 이견으로 보류

□ 爭點事項

- 법제처 : 과징금액을 1억원에서 20억으로 20배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저해
- 건교부 : 6월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액이 실효적 제재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20억 수준 필요

□ 調整經過

- 98.10.28 일반행정심의관 주재로 관계부처 과징금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양 부처 의견이 모두 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금번 개정안에서는 6월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액을 10억원으로 절충기로 결론

農水産物 安全性 調査基準 制定 所管 調整

☐ 推進背景

- 농림부가 제40회 차관회의(98.10.29)에 제출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안」에 대해 복지부에서 이견을 제기함에 따라 보류

☐ 爭點事項

- 복지부 : 농수산물 잔류농약 등의 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공전 등으로 고시·운영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허용기준을 제정할 필요 없음
- 농림부 : 농산물의 잔류농약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해(반감)되므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한 조사기준이 필요

☐ 調整經過

- 98.11. 3 총괄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급 조정회의 개최
- 98.11.11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개최

☐ 調整結果

- 농산물 생산단계에서의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저장단계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안전성 조사기준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

「外國人投資實務委員會」의 小委員會 機能 調整

□ 推進背景

- 재경부가 제41회 차관회의(98.11.5)에 제출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안」에 대해 산자부에서 이견을 제기함에 따라 보류

□ 爭點事項

- 산자부 :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협의체 기구로써 「외국인투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소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기 보다는 외국인투자촉진의 집행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기획단」 설치요청
- 재경부 : 외국인투자업무는 여러부처와 관련이 있으므로 부처간 업무협의를 위해서는 협의체 성격의 「소위원회」로 하는 것이 타당

□ 調整經過

- 98.11.9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 개최

□ 調整結果

- 명칭은 「소위원회」로 유지하고, 소위원회 기능수행을 위해 산자부 내부에 「외국인투자촉진단」을 설치·운영기로 함

責任運營機關의 設置・運營 關聯 調整

□ 推進背景

- 행자부가 제43회 차관회의(98.11.14)에 제출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이견제기

□ 爭點事項

- 산자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외에 행자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평가위원회」를 두는 것은 옥상옥임
- 복지부 : 민간인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계약직으로 책임운영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 문화부 : 문화부 산하단체는 성격상 사업성・수익성 기관이기 보다는 공공성을 갖는 단체이므로 동법의 획일적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음

□ 調整經過

- 98.11.17 일반행정심의회관 주재 관계부처 과장급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행자부 소속하에 「책임운영평가위원회」를 두되, 평가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정시 일정규모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고
- 민간인의 Agency 근무를 위해 시행령에서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 Agency 기관장의 책무에 공익성 추구를 명시토록 함

有害化學物質 關聯 協約의 國內履行事項 所管部處 調整

□ 推進背景

- 환경부에서 제43회 차관회의(98.11.14)에 제출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산자부에서 이견을 제기함에 따라 보류

□ 爭點事項

- 산자부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의 국내이행사항을 위한 국내법령 정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중이므로 협의후 소관부처를 결정할 사안임
- 환경부 : 금번 개정안에서 정하는 것은 협약당사국이 수입을 금지·제한하는 화학물질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화학물질 수출업자의 준수사항을 고시하는 것으로써 수출입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닌 유해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사항임

□ 調整經過

- 98.11.17 일반행정심의관 주재로 관계부처 과장급 회의 개최

□ 調整結果

- 「협약안」의 국내 이행사항은 「유해물질관리법」에서 정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수출입자의 준수사항 등을 고시할 경우 산자부장관과 협의토록 함

緊急監聽時 檢事の 事前指揮 與否 調整

□ 推進背景

- 법무부에서 제47회 차관회의(98.12.3)에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행자부에서 이견 제기

□ 爭點事項

- 행자부 : 긴급감청은 인질강도, 공공시설물 폭파협박 등 법원의 허가절차를 거쳐서는 범인검거·피해자 구제가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것인바, 사전에 검사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수사상 어려움이 있음
- 법무부 : 긴급감청시 검사의 사전지휘는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필요적 조치이며, 수사여건상 검사지휘를 받을 수 없는 급속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장치 있음

□ 調整經過

- 98.12.5 총괄조정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급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긴급감청시 원칙적으로 검사의 사전지휘를 받도록 하되, 경찰 수사의 애로를 감안하여 시행령 개정시 경찰이 검사지휘 없이 긴급감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도록 하고, 사전지휘도 문서이외에 전화·팩시밀리로 요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키로 함

官用車輛 管理方案 調整

□ 推進背景

- 행자부에서 제45회 차관회의(98.11.26)에 제출한 「관용차량관리규정 개정안」이 예산청 등 관계부처 이견으로 보류

□ 爭點事項

- 예산청 : 관용차량 관리는 부처자율에 맡기되 최소한의 관리를 위한 기준만 정하는 「기준관리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행자부 : 「기준관리방식」으로 전환시 기관간 형평성 문제와 연말 사업비 불용예산이 차량구입으로 전용되어 예산낭비 우려가 있으므로 총정수제 유지 필요

□ 調整經過

- 98.12.21 총괄조정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급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일단 금번 개정안까지는 총정수제로 관용차량 관리를 하되 내년중에 정수관리제를 폐지하고 기준관리방식으로 전환기로 결론

유스호스텔 新築時 일정넓이 道路確保要件 調整

□ 推進背景

- 건교부에서 제16회 차관회의(99.4.15)에 제출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문화부에서 이견제기

□ 爭點事項

- 문화부 :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유스호스텔 신축시 15m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제한하면 실질적인 유스호스텔 확충이 불가하므로 이를 완화해야 함
- 건교부 : 타법(관광진흥법)에서도 숙박시설 설치시 일정넓이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음

□ 調整經過

- 99.4.19 총괄조정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급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주거환경안전을 도모하고 관광숙박시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경우는 15m이상, 기타지역은 12m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결론

外國 放送프로그램의 輸入承認 基準 調整

☐ 推進背景

- 문화부가 제22회 차관회의(99.5.27)에 제출한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 이견제기

☐ 爭點事項

- 외교부 : 수입승인기준이 너무 포괄적이며 추상적임
- 문화부 : 수입승인 기준은 그 성격상 구체화하기 힘든 면이 있고 향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 승인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임

☐ 調整經過

- 99.5.28 일반행정심의회관 주재로 관계부처 과장급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수입승인 기준은 향후 「통합방송법」 제정시 구체화하도록 하고, 수입 불승인기준중 “국가의 권위손상”기준 및 특정국가 방송프로그램의 집중수입제한 규정은 삭제기로 결론

「2010 海洋 EXPO」開催豫定地 調整

□ 推進背景

- 해양부에서 제24회 차관회의(99.6.10)에 제출한 「2010 세계 해양엑스포 개최 및 유치계획안」에 대해 환경부에서 이견을 제기함에 따라 보류

□ 爭點事項

- 환경부 : 해양 EXPO 개최예정지인 여수시 소라면 일대는 수산자원 보전지구중 하나로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삼면이 막힌 폐쇄성 해역으로 해양오염 우려
- 해양부 :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개최예정지가 선정되어야 하며 예정지 지정시 해양오염 저감대책 및 환경친화적 시설배치로 오염최소화 예정

□ 調整經過

- 99.6.12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 개최

□ 調整結果

- 「2010 해양 EXPO」 개최예정지를 여수시 일대로 정하되, 구체적 계획수립과정에서 환경오염방지대책을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토록 함

政府組織改編 關聯 調整

□ 推進背景

- 「정부운영 및 기능조정방안」안건의 국무회의 상정에 앞서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 및 부처간 기능조정 등을 위한 정부전체 차원의 의견조율 및 당정간 협의 필요성 대두

□ 爭點事項

- 각 부처별로 소관부처 기능중 축소·폐지 또는 타부처로 이관예정인 경우 이견제시
예) 외국인투자촉진업무, 통상기능강화 등
- 정부운영시스템 혁신관련 이견제시
예) 개방형 임용제도 확대 등

□ 調整經過

- 99.3.16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분야 국무위원 간담회 개최
- 99.3.17 국무총리 주재로 비경제분야 국무위원 간담회 개최
- 99.3.18 국무총리 주재로 당·정협의회 개최

□ 調整結果

- 정부전체 차원에서 정부기능을 재조정하고 소관부처별 이견, 쟁점사항을 조정
-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國民苦衷處理委員會」機能活性化 方案 調整

□ 推進背景

- 99.3.23 국무회의시 확정된 「정부운영 및 기능조정방안」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서 관계부처 의견조율 필요성 대두

□ 爭點事項

- 행자부 : 위원장 신분이 비상임 민간인이므로 위원장에 대해 포괄적 인사권 부여는 곤란
- 고충위 : 기관의 독립성은 인사·예산의 독립을 전제로 하므로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위원장에 대한 포괄적 인사권 부여가 필수적

※ 위원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방안중 위원회의 시정권고권 강화·보강, 위원회 운영인력의 전문성 제고, 국민권리구제기관간 연계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는 합의

□ 調整經過

- 99.4.13 총괄조정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급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위원장에게 포괄적 인사권을 부여토록 결론
 - 법률(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를 신설하거나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소속장관」의 지위를 부여

※ 다만 이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여전히 반대중

政府部處 職制改正案關聯 爭點事項 調整

□ 推進背景

-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각 부처 직제개정과 관련하여 부처간 쟁점·이견사항이 있어, 관계안건의 차관회의 상정에 앞서 이를 조정키 위해 관계부처 조정회의 개최

□ 爭點事項

- 「외국인 투자위원회」운영 소관부처 조정(재경부 ↔ 산자부)
- 특수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재경부 ↔ 금감위) 등

□ 調整經過

- 99.5.19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행자부장관, 기획예산위원장,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등이 참석한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외국인 투자위원회」 간사기능은 재경부에서 수행토록 하고 특수은행의 건전성 감독기준 설정은 별도 논의토록 결정하는 등 직제개정 관련 부처간 쟁점·이견사항 조정

公衆保健醫 手當支給 與否 關聯 調整

□ 推進背景

- 경상북도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를 접수(99.4.7), 내용을 파악한 결과
 -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상충되어 일선에서 집행에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조정 필요성 제기

□ 爭點事項

- 행자부 : 공중보건의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은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지급 불가
- 복지부 : 실제로 무병원지역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공보의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며, 근거규정이 미비한 것은 입법적 불비일 뿐임
- 법제처 : 법적근거가 불명확, 초과근무수당 지급의 타당성 판단후 그에 대응하는 법적장치 정비 필요

□ 調整經過

- 99.4.16 일반행정심의회관 주재로 관계부처 과장급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무병원 지역에서 일반의사의 역할을 대행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공보의에게 그에 상응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필요하나 수당지급의 법적근거가 불명확하므로
 - 소관부처인 복지부는 행자부·법제처와 협의하여 수당근거 규정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토록 함

□ 經濟調整官室 □

通商業務 推進體系 調整

□ 推進背景

- 98.4.14 국무회의에서 외교통상부가 「ASEM 후속조치 추진 계획」을 보고하면서 외교통상부내에 외자유치지원반을 설치하겠다고 보고
 - 이에 대해 산자부가 지원반의 성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통상관련 업무영역과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로 발전, 이견이 계속되자 대통령께서 이에 대한 조정을 지시

□ 爭點事項

- 외교통상부
 - 통상활동이 외교통상부로 일원화되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필요(KOTRA 외교부이관 포함)
- 산업자원부
 - 현행 정부조직법과 직제 등의 테두리내에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KOTRA는 산자부산하에 두되 해외활동은 재외 공관과 긴밀히 협조
- 재정경제부
 -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 총괄은 재경부가 담당해야 하며, 정부조직법규와 그간 부처간 합의된 범위내에서 분명한 업무분장 필요

□ 調整經過

- 98.4.18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 98.4.22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
- 98.4.28 「통상업무 추진체계 조정방안」 국무회의 보고

□ 調整結果

- 현 정부조직법과 범위내에서 부처별로 대외통상기능을 수행하
되, 업무영역이 모호한 외국인투자유치업무에 대하여는 기능
을 조정
 - 해외에서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은 외교통상부가 중심이 되
고 관계부처가 협조하여 추진
 - 외국인투자 국내업무에 대한 종합지원창구는 산업자원부가
담당
 - KOTRA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기능도 중요하므로
산업자원부 산하에 두되, KOTRA 해외무역관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에 대하여는 재외공관장이 지휘·감독

外國人投資自由地域 設置計劃 調整

□ 推進背景

-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입법을 관련부처가 각기 추진하여 외국인 투자가 등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 제기

□ 爭點事項

- 재경부
 - 관리·규제위주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지원·촉진 위주의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대체
- 산자부
 -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폐지하고 「외국인투자자유지역설치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98. 4. 15 국회제출)
- 건교부
 - 외국인투자촉진 및 국제자유도시 개발·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투자자유지역설치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

□ 調整經過

- 98.5.9 경제조정관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재경부의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을 정부단일안으로 추진
 - 산자부, 건교부(안)에 포함된 규제완화와 他法 규제사항 적용배제 등 외국인투자활동 지원내용을 최대한 반영
 - ※산자부(안)은 산자부가 국회와 협의하여 철회
 - 건교부(안)은 소위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증후 입법추진
- 「외국인투자촉진법」 98. 9. 16공포(98. 11. 17 시행)

自由貿易協定(FTA) 推進計劃 調整

□ 推進背景

- 외교통상부는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심화현상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지역협정의 순기능을 살려 주요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

□ 爭點事項

○ 외교통상부

- 대상국가는 무역과 투자면에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일본·중국·EU등이 바람직하나, 우리산업과의 상호보완성, 상대국 체결의사확인, 국내 사전준비 등이 선행되어야 함
- 따라서 이들 국가와의 FTA추진여부는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우리산업과의 상호보완성, 해당지역에서의 비중, FTA 체결의사 등을 감안, 칠레와의 FTA를 우선 추진

○ 농림부

- FTA는 WTO 농업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등 농업부문에 큰 부담이 되므로 추진경위에 동의할 수 없으며, 칠레와 FTA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농산물을 대상에서 제외

□ 調整經過

- 98.10.31 대외경제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국무조정실장 주재)
- 98.11. 5 대외경제조정위원회 개최 (국무총리 주재)

□ 調整結果

- 외교통상부 계획대로 주요국과 FTA추진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우선 칠레와의 FTA를 추진
 - 다만, 농수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사전분석을 철저히 하여 나라를 선정하고, 협상과정에서도 농수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예외인정을 최대한 추진
 - 관련연구기관 등을 폭넓게 참여시켜 대상국가, 체결시 영향 등을 연구
- ※ 동 조정안에 따라 98.12.2~3일에 한·칠레 양국FTA실무협의를 개최하였고, 99.4.13~15일(서울), 99.6.21~23일(산티아고) 등 2차례에 걸쳐 양국고위급작업반회의를 개최하였음

런던金屬去來所(LME) 指定倉庫 誘致 調整

□ 推進背景

- 조달청은 LME 지정창고 국내유치와 관련하여 부산시와 광양시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LME 창고유치시 범정부적 종합조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요청

※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는 구리, 알루미늄 등 7개 비철금속의 전 세계 선물거래량 90%이상을 차지하는 세계최대의 비철금속거래소로 12개국 40개 지역에 400개 창고를 지정

□ 爭點事項

- 조달청
 - 89년에 유치여부를 최초로 검토하고, 95년에는 민간기업을 통한 유치방안도 검토하는 등 LME와 지속적으로 접촉추진
- 부산시
 - 98.2월 “LME지정창고 부산유치추진협의회”를 구성, 98.10월 대우경제연구소에 용역의뢰
- 광양시
 - 98.9월 “LME지정창고 광양유치추진협의회”를 구성, 98.12월 산업연구원에 용역의뢰

□ 調整經過

- 98.12.29 재정금융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과장급회의

□ 調整結果

- 부산시·광양시 모두 별도의 국고지원없이 유치를 추진하고, 창고는 민간에서 운영
- 향후 LME측과의 공식교섭창구는 조달청을 활용
 - 부산시·광양시 등의 독자적 접촉은 국익차원에서 자제
- 창고증권발행 등 관련제도 개선에 대해서 대해서는 재경부, 조달청, 선물협회 등에서 검토
- ※ 창고증권은 지정창고에 LME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철금속이 입고되면 LME가 창고운영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증권(Warrant)를 발행하고(무기명), 창고운영자는 이를 금융상품으로 유통
 - 따라서 금융상품으로 유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조달청은 조달창고물자에 대해 창고증권을 발행, 시범 운영할 계획

韓・EU 化粧品 關聯 通商懸案 調整

□ 推進背景

- EU산 화장품 수입시 수입자의 자가검사의무를 면제하기 위해 EU지역 현지실사를 실시하기로 EU측과 합의(99. 4. 23)
- 그러나 실사대상업체수・시기 등에 있어 외교통상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간 이견

□ 爭點事項

- 외교통상부
 - EU내에서는 「화장품에 관한 EU이사회지침」과 「유럽화장품제조협회 guideline」이 모든 EU화장품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EU내 1개업체당 1개제조시설만 실사
 - 현지실사는 99.6월부터 실시하여 2000.1.1일부터 자가검사 면제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 EU의 지침과 guideline은 강제성이 없고 화장품 사용에 따른 안전문제 등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국가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EU각국내 1개업체당 1개제조시설에 대해 실사

- 실사인력 등 우리측의 상황에 따라 하반기부터 실사를 실시하고 실사완료업체에 한해 2000.1.1일부터 자가검사 면제

□ 調整經過

- 99.5.28, 경제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 개최

□ 調整結果

- EU측이 EU의 지침과 guideline이 EU내 모든 제조시설에서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호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입증할 경우 EU측 의견 수용(세부내용은 양측 전문가회의에서 논의)
- 실사는 EU측으로부터 대상업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실시하여 면제여부까지 결정
 - 단 실사대상업체수가 40개를 초과할 경우 최초 40개는 180일을 적용하고 그후 매20개마다 90일씩 기간을 연장하되, 실사대상 우선순위는 EU측이 정함

※ 동 조정결과에 따라 99.6.3일 벨기에(브뤼셀)에서 「한·EU화장품전문가회의」를 개최, 조정안대로 타결

- 99.8.5 한국 주EU대사와 EU집행위 대외관계담당 집행위원간 최종합의
- 99.9.10 ~ 10.15 EU측 지침·guideline이 EU역내에 엄격히 적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실사

輸入醫藥品 保險藥價 登載價 調整

□ 推進背景

- 국산의약품은 의료보험약가기준표의 등재가보다 평균 30.7%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어 병·의원들이 동 차액만큼 음성마진을 확보, 의료보험진료수가가 낮아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
- 수입의약품은 약가기준표에 등재하지 않고 싼거래가격으로 상환해옴
 - 병·의원들이 음성마진이 발생하는 국산의약품을 선호함에 따라 외국업체 불만이 가중되어 한·미 및 한·EU간 통상마찰로 비화
- D.Aaron 미 상무차관은 지난 7.26 방한시 수입의약품이 약가표에 등재되더라도 국산의약품 등재가가 인하되지 않는한 수입의약품이 차별대우를 받게된다면서, 이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
 - * 차별대우 불시정시 WTO제소 또는 수퍼 301조 발동 가능성 시사
- EU도 약가상환제도의 내외산차별을 이유로 7.30부터 우리나라에 대하여 무역장벽 제거조사를 개시한다고 주EU 대표부에 통보
- 외교통상부는 이문제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이 조정해 줄 것을 요청

□ 調整經過

- 99. 6. 24 재경금융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과장회의
- '99. 8. 2 경제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 개최

□ 調整結果

- 99. 7. 1일부터 수입의약품도 약가표에 등재하되, 등재가는 실거래가격의 77.2% 수준으로 결정
 - 99. 10. 1부터 국산의약품의 음성마진을 철폐하고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시행하여 수입의약품 차별문제를 해소하고, 병원적자보전을 위해 보험진료수가를 인상(15.82%p 예상)하는 것을 목표로 사전준비 작업 추진
 - 보건복지부는 병원경영개선방안을 조속 확정, 동 방안을 토대로 8월말까지 시민단체 및 여당에 대하여 국산의약품 약가 인하 및 보험진료수가 인상의 동시시행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득
 - 그 이후 재정경제부와 보험진료수가 인상문제 협의
- ※ 보험약가는 물가지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의료수는 물가지수산정에 포함
- 의료수가 15.82%p 인상시 소비자물가 0.4%p 상승

雇傭安定證券 販賣促進對策關聯 調整

□ 推進背景

- 고용안정증권의 판매가 부진함에 따라 노동부는 동 증권에 대한 판매촉진대책을 요구하였으나,
 - 재경부 등 관련부처에서 소극적이거나 이견을 보여 조정의 필요성 제기
 - * 98.3.30~4.15일 동안 537.8억원(일평균 35.8억원) 판매

< 판매부진사유 >

- 수표로 채권매입시 실명으로 이서하는 문제
- 자금출처조사면제에 대한 불신
- 향후 보다 좋은 조건의 비실명채권발행보도 등
- 판매대행사인 증권사에 대한 판매유인 미흡

□ 爭點事項

- 재정경제부
 - 채권거래와 수표거래는 각각 별개의 금융거래로서의 채권거래의 실명확인 생략이 수표거래의 실명확인생략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실명법상 수표거래의 실명확인 생략은 불가능

○ 노동부

- 고용안정채권의 판매촉진을 위해서는 수표로 채권구입시 이서를 생략하고 채권판매대행 증권사가 사고수표여부를 발행은행에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조치필요

□ 調整經過

-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실업대책추진위원회」 개최(98.4.9) 및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조정

□ 調整結果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표로 동 증권을 구입할 경우 실명확인(이서)을 생략
- 재경부, 국세청 등 관련부처 공동명의로 자금출처 조사면제를 재차확인하는 홍보자료 배포, 광고 등을 하여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구매자의 의구심을 불식
- 증권사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판매실적에 연동시켜(0.2→0.25~0.45%)증권사에 적극적인 판매유인 제공

農業協同組合法上の 信用監督規程 調整

□ 推進背景

- 농·수·축협 개혁조치로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신설통합조합의 신용감독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간 이견
- 신용사업에 대해 농림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협의하여
감독하는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체계 일원화 필
요성 제기

□ 爭點事項

- 금융감독위원회
- 99년 상반기 IMF와의 정책협약에서 농·수·축협 신용사업의 감
독권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기로 이미 합의되었고,
- 신용사업은 일반은행의 취급업무와 성격이 동일하므로 일
반은행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이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통
합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 금융감독
체계상 타당

○ 재정경제부

- 신용사업감독권은 신용사업의 범위설정 등 기본정책, 사업계획 수립등에 관한 일반업무 감독권과 건전성감독권으로 구분 가능한바
- 통합조합의 신용사업중 일반업무 감독은 농림부와 재경부가 협의하여 수행하는 것이 타당
- IMF와의 건전성 감독 일원화 합의는 일반업무 감독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님

□ 調整經過

-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합의 조정

□ 調整結果

- 신용사업의 범위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농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감독하도록 농업협동조합법률안에 반영
-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과 중앙회의 신용사업의 경영 건전성 감독 및 필요한 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조치

銅鑛石・粗銅에 대한 割當關稅 適用關聯 調整

□ 推進背景

- 99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물품과 적용관세율 조정시 동광석・조동의 할당관세율과 관련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간 이견

< 할당관세(관세법 제16조) >

- 원활한 물자수급, 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는 국내가격의 안정등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본세율에서 40%를 가감한율의 범위에서 관세율 조정

□ 爭點事項

- 재정경제부 : 동광석・조동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배제
 - 동광 및 조동의 수입가격이 6개월전 대비 대폭하락(각 △24.4%, △26.2%)하였으므로 할당관세 적용기준상 제외하는 것이 당연
 - 동광 및 조동의 주수입업체인 LG금속이 일본광업과 합작을 추진중이나, 동 합작계약의 후원을 위해 운용기준과 달리 할당관세를 운용할 경우 향후 정책운용에 나쁜선례를 남김

○ 산업자원부 : 동광석·조동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지속

- 원자재 가격의 변동은 할당관세의 여러 가지 요건중 하나에 불과하며 산업경쟁력 강화,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서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바
- 동광석·조동은 원활한 물자수급,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이 필요한 물품
- 또한 동광석·조동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제외시 LG금속이 일본광업과 추진중인 외자유치 조건이 불리해지거나 계약체결이 장기간 지체될 우려

□ 調整經過

○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 조정

□ 調整結果

○ 동광석·조동에 대해 할당관세를 계속 적용하되 적용관세율을 동광석 0.5%, 조동 1.5%로 조정

	기본관세	99상반기 할당관세	재경부안	산자부안	조정안
동광석(%)	1	0	1	0	0.5
조 동(%)	2	1	2	0	1.5

預貸金利差 關聯 調整

□ 推進背景

- ‘98년 하반기 이후 시중예금금리는 하향추세에 있으나 대출금리는 고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고금리시절 대출받은 기존차주가 신규 차중에 비해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등으로 서민들의 민원 유발

※ 특히 가계의 예대금리차가 확대

(단위 : %p)

	97.12	98.1	11	12
예대금리차(전체)	3.5	3.1	4.5	4.0
예대금리차(가계)	2.1	1.4	6.5	5.6

□ 爭點事項

○ 금융감독원

- 일반은행의 대손율(3.2%)이 높아 이를 고려한 일반은행의 실질예대금리차는 마이너스($\Delta 1.2\%$) 수준이고,
- 일반은행의 손익이 97회계년도 3조 8천여억원의 적자에 이어 98회계년도에도 14조여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예대금리차의 축소는 일반은행 재무여건에 과중한 부담
- 또한 현재의 과도한 예대금리차는 외환위기시 적용했던 20%이상의 높은 금리의 대출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주로 기인하는 바 이는 대부분 99년 상반기까지 자연 해소될 전망

○ 공정거래위원회

- 현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는 엄격한 요건하에서 은행이 이자·보증료·지연배상금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 채무자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채무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구비하고 있으나
- 금리가 하향추세에 있을 경우 채무자 보호규정으로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

□ 調整經過

- '99. 1. 22(금) 경제행정조정관 주재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장, 금융감독원 감독2국장, 제일은행 여신담당임원을 소집하여 대책회의 개최

□ 調整結果

- 과도한 예대금리차 축소를 위하여 금융기관 스스로 경비절감과 대손율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강화
- 고금리 시기에 일률적으로 결정된 가계대출금리를 빠른 시일내에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재평가하여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조정
- 현행 여신거래약관 규정상 은행은 대출약정기간중 금리조정이 가능한 반면 차주는 대출금리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불비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

郵遞局의 貸出業務 取扱 關聯 調整

□ 推進背景

- 우체국이 한미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99. 7. 1일부터 창구에서 대출신청 접수업무를 취급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대해 농림부에서 이견제기

< 대출업무 개요 >

- 우체국 창구에서 대출 신청서류 접수 → 한미은행에서 심사하여 대출실행 여부 결정 (한미은행 자금으로 대출)
- 체신예금담보대출 : 예금액의 95% 범위내에서 5천만원 한도
- 신용대출 : 2천만원 한도

□ 爭點事項

○ 농림부

- 정부기관인 우체국이 대출업무를 취급할 경우 농어촌 지역에 기반을 둔 농·축·수협 영업기반을 급속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큼
- 농·축·수협 조합장 등의 반발로 협동조합 통합 등 개혁을 저해할 우려

○ 정보통신부

- 일반은행 금융창구의 95%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농·축·수협의 대출금리가 일반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 농어민에 대한 대출확대 및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창구를 가진 우체국의 대출업무 취급이 필요

	한미은행(신용)	단위농협(5월평균)
대출금리	12.0%	12.64%

○ 금융감독원

- 금융기관과 공공기관간 업무 제휴는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금융기관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때까지 유보 필요

□ 調整經過

-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합의 조정

□ 調整結果

- 금융감독원이 은행감독규정 제 16조에 따라 한미은행의 업무제휴 사전보고를 반려하여 우체국의 대출업무 취급을 유보토록 함
- 외국의 사례 검토,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차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

外國人 産業技術 研修生 關聯 制度改善

□ 推進背景

- 국내 경제사정 악화로 대량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규모 조정 필요
- 연수생 규모 조정에 대해 재경부, 노동부, 해양부, 중기청 등 관련부처간의 이견이 있어 조정 필요

□ 爭點事項

< 98년도 연수생 신규도입 문제 >

- 재경부 등 공통 : 대량실업사태 등 국내고용사정을 감안하여 신규도입 전면 중지
- 해 양 부 : '98하반기 이후에도 연근해 어선원의 구인난이 지속될 경우에는 재추진

< 대체인력의 충원문제 >

- 재경부 : 연수기간 만료 등에 따른 대체인력 규모 축소
- 노동부 : 대체인력을 전면금지하여 산업연수생 규모 축소
- 중기청 : 중소제조업(특히 3D업종)의 인력난해소를 위해 대체인력 계속도입

< 도입중인 연수생 도입규모 축소문제 >

- 건교부 : 건설인력 2,500명중 도입계약이 체결된 1,915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추가계약 유보
- 해양부 : 연근해 어선원 1,000명은 도입하되 내항선 연수생은 도입선발 유보
- 중기청 : 중소기업(특히 3D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기로 결정된 연수생은 계속 도입

< 조선족 사기피해 사건관련 연수생 도입 >

- 재경부, 외교부 : 도입규모는 1,000명으로 하되, 외교정책적인 면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처
- 노동부, 안기부 : 1,000명 별도배정 이외에 추가도입 논의 반대

< 자진신고 불법체류자 처리문제 >

- 중기청 : 자진신고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출국 조치
- 법무부 : 자진신고한 경우 고용주와 불법체류자의 처벌을 면제하고 있으나, 출국유예조치는 불가
- 노동부 : 내국인 고용촉진을 위해 불법체류자 출국유예조치 불필요

□ 調整經過

- 98.5.1, 경제조정관 주재로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실무협의회」 개최
- 98.5.21,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調整結果

〈 98년도 연수생 신규도입 문제 〉

- 98년도에는 원칙적으로 신규인력도입 동결
- 다만, 연근해 어선원의 신규도입 문제는 98하반기 인력수급 상황 분석 후 재검토

〈 대체인력의 충원문제 〉

- 산업연수생중 합법적으로 체류한 후 출국한 자에 대한 대체인력의 도입은 계속허용
- 연수생규모의 점진적 축소문제는 98년 하반기 인력수급 동향을 고려하여 추후결정

〈 도입중인 연수생 도입규모 축소문제 〉

- 도입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건설 및 내항선 연수생의 추가도입은 유보
- 중소제조업(중기청 소관)분야 인력은 계획대로 도입

〈 조선족 사기피해 사건관련 연수생 도입 〉

- 사기피해 중국동포 대상으로 연수생 1,000명을 특별배정 도입하되, 연수종료후 대체인력은 인정하지 않음
- 99년 이후에 추가 도입하는 문제는 향후 우리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 검토

〈 자진신고 불법체류자 처리문제 〉

- 불법체류자에 대한 출국유예조치 문제는 법집행의 형평성과 외국인 체류질서 확보차원에서 법무부 의견대로 처벌면제에 국한

엑스포科學公園 大田廣域市 無償移讓

□ 推進背景

- 대전광역시가 대전엑스포는 대전시민의 노력과 땀의 결정체라면서, EXPO공원과 EXPO재단기금을 대전시로 무상양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관련부처와 이견 대립

□ 爭點事項

- 대전시 : 공원과 기금을 대전시로 무상양여
- 재경부, 산자부, EXPO기념재단 : 공원의 운영주체를 기념재단으로 유지하고, 재단에 대한 산자부의 관리감독권을 대전시로 이양
 - 국가사업으로 조성된 국가 및 국민의 재산을 법률근거없이 특정 자치단체에 무상이양은 곤란

□ 調整經過

- 98.7월부터 수차에 걸쳐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 調整結果

- 엑스포공원의 대전시 무상양여를 위해서는 법적근거 필요
 -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폐지법률」을 제정하여 재단을 해산하고 동법 부칙에 재단재산 처리방법에 관한 내용 규정 필요

□ 其他 特記事項

- 98.10.14 의원발의로 “EXPO기념재단폐지법률안” 국회제출
- 99.1.1 동법시행으로 EXPO공원은 대전시로 이양되었음

나훗뜨까 韓・러 工團造成

□ 推進背景

- 99.1.25 러시아의 프리마코프 총리가 아국 총리께 “나훗뜨까 한・러공단”조성사업의 협정 서명이 한국측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통령 방러전에 서명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움에 따라 관련부처 협의 및 이견 조정 필요

□ 爭點事項

-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이전에 양국 경제의 협력증진 차원에서 사업규모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의 입장 조정 필요

□ 調整經過

- 99.2.25, 산업심의관이 참석하여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사업규모 축소 : 30만평 → 5만평~10만평, 필요시 추가
- 사업기간 연장 : 3년 → 6년내 완료
- 공단조성은 SOC등 러시아측의 의무이행에 맞추어 추진
 - ※ 99.3.5 재경부 차관주재 조정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여 외교부에서 러시아 총리에게 통보

□ 其他 特記事項

- 한국측의 수정제의를 러시아측이 수용하여 99.5월 대통령 방러시 양국간 “나훗뜨까 한・러공단건설협정” 서명

KTX-2 事業 政府支援分擔豫算 編成方案

□ 推進背景

- 97.7월 제1차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에서 KTX-2 사업(고등훈련기 개발사업) 개발비용중 20%는 정부가 추가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예산 편성방안에 대해 국방부와 산업자원부 등의 이견이 있어 조정 필요

□ 爭點事項

- 국방부 : KTX-2 사업 정부지원분담(20%)을 국방부 예산에 편성할 경우 기존 방위력개선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산자부 등 타부처예산에 편성
- 산자부,과기부 : 타부처가 관리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수용곤란

□ 調整經過

- 99.2.27, 제3차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실무운영위원회」 참석
- 99.4.22, 국무총리 주재 제2차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개최

□ 調整結果

- KTX-2 사업 정부지원분담(20%)을 국방부 예산에 편성하되 기존 방위력개선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F-16 戰鬪機 追加生産 事業推進

□ 推進背景

- KFP 사업종료에 따른 생산공백으로 항공산업인력·장비·기술의 유희화방지와 국내항공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유지를 위해 F-16 전투기 추가생산 등 정부차원의 물량창출 및 예산지원 필요
- 추가생산에 따른 소요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국방부와 기획예산처간의 이견이 있어 조정 필요

□ 爭點事項

- 산자부 : KFP 사업종료시 축적된 항공산업인력·장비·기술의 붕괴 방지를 위해 F-16 전투기 40대 이상 추가생산 필요
- 국방부 : 기존 방위력개선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소요재원 추가 지원
- 기획예산처 : 2000년 재정여건상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어려움

□ 調整經過

- 99.4.22, 국무총리 주재 제2차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개최
- 99.5.7, 99.8.11,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調整結果

- F-16 추가생산규모는 ○○대로 하고, 2000년도 예산반영규모는 1,036억원으로 함
- 소요재원의 조달은 기존 방위력개선사업 및 운영·유지예산등의 조정을 통해 소요예산을 반영

國家標準基本法施行令 制定

□ 推進背景

- 99.2월 의원발의로 제정된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하여 환경부·정보통신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서 동법의 시행령 제정을 반대하고 법개정을 요구

□ 爭點事項

- 현행 소관부처에서 수행중인 각종 시험·검사·인증업무 등을 산업자원부와 사전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은 곤란
 - 환경·정보통신·식품·의약품 관련 시험·검사기관 인정과 제품인증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산자부의 검토능력에 한계

□ 調整經過

- 99.2.18, 5.6 산업심의회 주재 조정회의 개최 및 부처간 협의

□ 調整結果

-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국가표준기본법을 시행도 하지않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 시행령에서 현재 각기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찰소지를 없앴
- 다만, 환경부관련 환경 ISO인증업무 등 개정을 요하는 규정은 현재 개정을 추진중인 “환경기술법” 부칙의 개정을 통해 반영

□ 其他 特記事項

- 조정결과를 수용하여 99.7.29 시행령 제정·공포
- 본 사항은 의원입법제정시 정부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데서 비롯되었고, 시행령제정시는 관계부처간 논의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업무추진이 부진한 것에 기인하였음

中小企業 展示販賣場 賃貸延長

□ 推進背景

- 서울시의회의 중소기업 여의도종합전시장 부지 무상임대 연장 동의안 부결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무상임대 연장 건의 및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사업 위축 우려

□ 爭點事項

- 서울시의회 : 중기협중앙회의 전시장 수익금 변칙운용 등 문제점의 시정조치없이 부지 무상임대는 부당
- 서울시 : 전시장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시의 요구사항 우선 수용
- 중기협중앙회 : 서울시의 요구사항 수용곤란

□ 調整經過

- 99.7.21, 경제조정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급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중기협중앙회는 전시장 운영상 문제점을 시정
- 서울시는 전시장 운영개선안을 마련하여 중앙회와 재협약안에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의회를 설득하여 무상임대 연장되도록 노력

□ 其他 特記事項

- 서울시에서 중기협중앙회의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의회에 무상임대 연장 동의안 재상정 추진

音盤·비디오物및게임物에관한法律施行令 制定

□ 推進背景

- 문화관광부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음비게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대학가 주변에 성업중인 멀티문화방(속칭 인터넷게임방)에 대한 지도·감독권한과 통신게임물에 대한 심의권한의 소재 등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간의 이견이 표출되었고
- 이와 관련하여 제10차 정보화추진위원회(‘99.3.31), 감사원 감사결과, 정보보고, 언론보도 등에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調整經過

- 일시·장소 : ‘99.4.17(토) 10:00, 경제행정조정관실
- 참석자 : 총 9명
 - 경제행정조정관(주재),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 정보통신부 정보기반심의관, 정보통신부 기술정책심의관, 교육부 교육 환경개선국장,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관,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 교육문화심의관, 규제개혁2심의관
- * 조정관회의 전에는 문제파악을 위하여, 조정관회의 후에도 구체적 합의문안 작성상 이견조정을 위하여 산업심의관 주재 조정실무자회의를 3회 실시
 - 경제조정관회의시 법제처 법제관, 국무조정실내 관련심의관도 참석하여 조정결과의 수용성을 높였음

□ 爭點事項 및 調整結果

◇ 쟁점1 : 통신게임물에 대한 심의권한

○ 문화관광부

- 게임물의 공공성 및 윤리성유지와 청소년보호를 위해 통신게임물도 음비게임법의 규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심의해야 함
- 동일한 게임물을 전달수단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서 심의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정보통신부

- 외국의 서버로부터 직접 제공되고 있는 통신게임물은 사전심의가 불가능하고, 문화부로서는 음란·폭력성 통신게임물에 대한 접속회선차단 등 실효성있는 규제수단도 없음

○ 조정결과

- 통신서버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게임물중 사전등급분류가 불가능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 쟁점2 : 멀티문화방에 대한 등록등 감독 권한

○ 문화관광부

- 현재 PC를 이용한 게임장에서는 이용자들이 통신게임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동 게임장은 음비게임법령상의 「게임제공업」중 멀티문화방에 해당하고, 주무관청 등록은 청소년탈선 등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수단임

○ 정보통신부

- 소위 「멀티문화방」은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국민의 정보이용 능력 제고와 컴퓨터·게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비즈니스로서, 이곳에서는 게임외에 정보검색·자료전송 등 다양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에 해당됨

○ 조정결과

- 멀티문화방 등록업무는 문화관광부에서 담당하되 신고수준으로 관리하고, 빠른 시일내에 동법률 개정 추진(등록제→신고제)

◇ 쟁점3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게임제공업 허용

○ 문화관광부

- 게임제공업을 건전하게 관리·육성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도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보건법시행령상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금지시설’에서 컴퓨터게임장을 삭제해야 함

○ 교육부

- 초·중·고교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는 컴퓨터게임장 설치를 허용할 수 없음

○ 조정결과

- 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해 현행법규는 계속 존속
- 다만, 학생들의 건전한 인터넷이용을 조장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중 상대정화구역내에서는 가급적 게임제공업을 허용(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신축적으로 운용토록 교육부가 산하교육청에 문서로 지침 시달)

中繼有線放送 채널수 制限 調整

□ 推進背景

- 정보통신부가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채널수 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유선방송기술기준에 관한규칙」(정보통신부령) 개정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문화관광부가 이견을 개진하며 당실에 조정을 요청

* 중계유선과 경쟁관계에 있는 종합유선(CATV)방송법이 '99.2 개정되어 중계유선업자도 관련규제완화를 요청

□ 爭點事項

○ 정보통신부

- 모법의 근거없이 부령인 「기술기준」으로 중계유선방송의 채널수를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규제완화시책에도 부합되지 않음
- 중계유선의 역무범위에 방송프로그램의 장르별 편집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문화관광부

- 중계유선의 방송용 채널확대를 통합방송법 제정시까지 보류해야 하고, 무분별한 편집·편성의 방지를 위해 채널제한 철폐는 불가함
- 중계유선의 역무범위에 프로그램 편집·편성은 포함되지 않음

□ 調整經過

- 일시 · 장소 : 1999. 7. 16(금) 15:00, 산업심의관실
- 참 석 : 총 5명
 - 산업심의관(주재), 정통부 방송위성과장, 문화부 방송행정광고과장, 법제처 담당법제관, 규제개혁3심의관실 담당과장 등
- 주요 쟁점
 - 중계유선의 채널제한 철폐 여부
 - 중계유선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허용 여부

* 조정결과를 양부처에 보내 자구에 대한 동의를 받는 등 면밀한 실무조정을 하여 관련협회의 반발 무마 가능

□ 調整結果

- 중계유선의 역무수행에 필요한 만큼 채널수 확대(12개→31개)
 - * 기술적인 이유로 방송에 사용곤란한 채널 6개 포함
- 중계유선의 역무범위에 방송프로그램의 장르별 편집 · 편성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추진

電子貨幣와 統合交通카드의 連繫 開發

□ 推進背景

- 건설교통부와 금융결제원이 각각 전자화폐와 통합교통카드개발을 검토하던 중, 금융결제원에서 양자의 연계 개발·운영을 위한 조정을 요청

□ 爭點事項

- 금융결제원
 - 전자화폐는 생활·유통·관광·교통·공공분야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다기능카드로서 중복개발방지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교통카드 등 별도의 분야별 카드와 연계해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건설교통부
 - 지자체나 교통운영기관에 연계개발 강제는 곤란
 - 현행 교통운영기관이 관리하는 교통카드 판매수수금을 전자화폐 발행기관(은행)이 관리하게 됨에 따라 교통운영기관의 반대 예상
 - 전자화폐의 안전성, 교통카드시스템의 표준화, 비접촉식 전자화폐 개발 등에 대한 금융결제원의 능력 검증 필요
 - 교통요금은 할인, 환승, 연계 등에 따른 요금체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전자화폐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복잡한 특성이 있음

○ 서울특별시

- 현재 서울시 버스와 지하철카드 호환사용을 위한 관련기관간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하고 7월부터 단말기 개선작업을 추진할 계획임
- 전자화폐의 교통분야 연계사용은 기술개발문제, 기존카드개발회사의 이해대립(국민 PASS카드 170만매, 교통카드 620만매 기발행), 할인 등 복잡한 교통요금체계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운 문제임

□ 調整經過：5次例 調整會議 開催

○ 일 시：99. 4.30, 5.14, 6.4, 6.10, 6.18

○ 장 소：국무조정실 회의실

○ 회의참석자：총 13명

- 산업심의관(주재), 국가정보원 업무담당자,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과장, 건설교통부 도시교통과장, 산업자원부 생활전자사업과장, 서울시 대중교통과장, 한국은행 금융결제부장, 금융결제원 전자금융부장, 한국정보보호센터 박성준 박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정욱 박사, 교통개발연구원 안계형 박사, 한양대학교 최명렬 교수, 영남대학교 정현열 교수

* 문제의 기술성, 복잡성 및 민간업자의 기득권 보호, 감독기관의 불명확한 입장 등으로 회의를 통하여 관계기관간 인식수준의 제고와 관련분야 전문가 인지를 함으로써 5차에 걸쳐 회의를 하였음

□ 調整結果

- 소액결제의 편리성, 주화발행비용 절감, 여러장의 카드소지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해소 등을 위하여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에서 개발하는 전자화폐의 확대보급이 필요함
 - 또한 카드발급·인프라구축 및 운영상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카드와 전자화폐의 연계 개발·운영의 필요성도 인정됨
- 건설교통부·정보통신부·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개발·추진하는 한국형 전자화폐가 교통·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기존 교통카드가 사용되고 있는 지역에는 기존 교통카드와 함께 한국형 전자화폐도 교통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규도입지역은 한국형 전자화폐를 권장토록 함
 - 서울시의 버스 및 지하철 호환사용을 위한 리더기 개선작업은 가능하다면 금융결제원의 전자화폐용 리더기 개선작업과 같이 실시하는 방안 검토
 - 금융결제원은 한국형 전자화폐가 교통·통신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고 국제적인 호환이 가능하며, 모든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전자화폐 표준을 조속히 제정하고, 위변조 등에 따른 보안문제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
 - 정보통신부는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국내의 다양한 IC카드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 IC카드(전자화폐 포함) 표준화 작업을 추진

韓電 電柱 共同利用 方案

□ 推進背景

- 50년대 이후부터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총 전송선로의 70% 이상을 한국전력의 전주를 이용하여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 '93년부터 한국전력에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전주에 설치되어 있는 전송선로의 철거를 요청하여 양사업자간에 법정 소송 등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
- 따라서 정부에서 전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주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

□ 爭點事項

- 정보통신부
 -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한국전력에 전주 임대를 요청할 수 있고 합의가 안될 경우, 정통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산업자원부
 - 전기설비는 안전상 중요한 시설이므로 전기사업법에 산자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

□ 調整經過

- 98.10 경제조정관 주재로 정통부·산자부 관계국장회의 개최

□ 調整結果

- 동 사항을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으로 조정
 - * 통신사업자가 전송선로 설치를 위해서는 전신주 뿐 아니라 철도, 도로 등 다른 시설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신설

Y2K問題 對策 推進

□ 推進背景

- Y2K문제는 국가관리와 산업경제활동에 큰 차질을 야기할 수 있고, 2000년전에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범국가적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

□ 調整經過

- 당실에서 Y2K문제의 해결촉진을 위해 세차례('98.3, '98.6, '99.2) 「컴퓨터 2000년문제 종합대책」을 수립, 국무회의 보고후 범국가적으로 추진
- 「Y2K대책협의회」, 「Y2K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국가사회 전반의 Y2K 추진실태와 Y2K비상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
 - * Y2K대책협의회(위원장: 경제조정관) : '98.4월 설치이후 13차례 개최
 - * Y2K관계장관회의(위원장: 국무총리) : '99.1월 설치이후 2차례 개최
- 13대 중점분야의 소관부처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소관별로 Y2K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대통령께 보고('99.6~7)
 - * 13대 중점분야 : 금융(한국은행), 통신(정보통신부), 전력/에너지·산업자동화 설비(산업자원부), 운송·수자원(건설교통부), 해운항만(해양수산부), 환경·수자원(환경부), 의료(보건복지부), 행정(행정자치부), 국방(국방부), 중소기업(중소기업청), 원전(과학기술부)

□ 當室 主要 推進施策

- 13대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소관부처를 지정하여 집중 관리토록 하는 한편, Y2K대책협의회를 매월 개최하여 추진실태를 수시로 점검('98.4이후)
 - * 당초 10개분야를 중점관리, 금년초에 3개분야(국방, 환경, 수자원) 추가
- 범국가적 대응기한을 설정하고, 문제해결지침을 배포('98.7)
 - 영향평가('98.8), 변환('99.2), 검증('99.4), 시험운영('99.8)
- Y2K문제해결 촉진하기 위한 각부처 활동을 지원('98.4이후)
 - 정부·금융권자금 지원(1,500억원), Y2K해결비용이 세제지원(중소기업 15%, 대기업 5%), 현장컨설팅, Y2K정보제공 등을 지원책 실시
 - 공공기관의 Y2K해결제품 구입의무화, 중소기업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중소병원도 수혜토록 조정,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시 기업의 Y2K대응상황을 반영토록 하는 등 유도책을 병행
 - 유·도선분야 Y2K문제 해결주체 조정
 - 내수면 유·도선은 행정자치부, 해수면 유·도선은 해양경찰청이 관할
- Y2K문제 해결을 자체선언토록 유도
 - 13대 중점분야에 대한 전문가 팀의 현장점검 계속 실시
- Y2K문제에 대한 대국민홍보와 국제협력을 지원
 - Y2K 캠페인주간('99.5.24~5.29)에 Y2K대응안내문 300만부 배포
 - Y2K관련 비용부담, 손해배상 등에 대한 법적 대응안내서를 배포('99.3)
 - 대형건축물의 Y2K 대응요령 배포, 현장점검 등을 실시('99.5부터)
 - Global Y2K Summit, 아시안 대표자회의('99.3) 및 UN Y2K 대표자회의('99.6) 등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추진

○ Y2K 비상대비활동 강화

- 중앙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통하여 각부처에 Y2K재난대비계획을 수립토록 지침 시달('99.7)
- '99.6말까지 Y2K비상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Y2K비상대처훈련을 실시토록 조치하는 한편, 119서비스의 Y2K문제 점검
- 연말연시 범정부차원의 「Y2K종합상황실」과 각부처의 「합동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는 계획 마련중
- Y2K대책협의회를 통하여 분야별 Y2K비상대비계획 점검('99.8, 전력/에너지, 원전분야 점검)

○ GPS문제 대비 철저

- GPS문제('99.8.22) 비상대비를 위해 '99.7월부터 현황파악과 해결실태를 점검하고, 문제발생 당일 통신·선박·항공 등 주요분야에 대한 합동비상근무 실시

□ 調整結果

- '99.7월말 현재 13대 중점분야에 속한 5,565개 기관의 Y2K추진실태는 평균 97.9%로서, 원전·환경·해운항만분야는 문제해결을 완료하였고, 중소기업분야가 다소 미흡

※ 분야별 현황

분야	원전	환경	해운항만	금융	전력/에너지	운송	산업자동화	수자원	국방	통신	행정	의료	중소기업
진척도(%)	100	100	100	99.9	99.8	99.8	98.6	97.8	97.7	97.3	96.7	95.9	90.2

- '99.8월까지의 대부분의 기관이 문제해결을 완료할 예정임

* Y2K대책협의회에서 유관기관간 충분한 토의를 거쳐 추진하므로 관계기관의 협조가 매우 원활함

上岩洞 월드컵 競技場 送電線路 地中化 關聯

□ 推進背景

-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인근의 송전탑 14기로 인해, 월드컵 대회 개최시, 헬기 항공촬영상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어,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 제기

□ 爭點事項

- 산업자원부, 한국전력 :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비용은 서울시에
서 부담
- 서울시 : 한전이 투자우선 순위를 재조정하여 사업시행

□ 調整經過

- '99.1.14,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기관의 관계관 조정회의 개최
- '99.5. 4,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기관의 국장급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월드컵 대회라는 범국가적 사업에 한전이 적극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지중화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경기장 인근의 최소한의 송전탑 7기의 지중화를 조속히 시행키로 조정완료
- * 추후 한전은 지중화범위를 넓혀서 당초 제기된 총 14기의 지중화를 추진키로 결정하였음

氣候變化協約 對應 綜合對策 關聯

□ 推進背景

-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선진국으로부터 이산화탄소 감축의무를 부담토록 계속 압력을 받고 있으며, 세계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성장기조 유지를 위해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의 개편이 불가피하나, 실제 이행에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예상됨
- 따라서 '98.12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수립이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중
-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에서 별도로 추진해오던 기후변화협약 업무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여 사회 모든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대책을 마련

□ 爭點事項

- 각종 온실가스 배출관련통계의 정리 및 활용방법
- 외국의 온실가스 거래제도에 대한 연구 및 우리에 대한 영향평가
- 산업자원부와 환경부간 자발적협약 추진 관련 청정연료 사용 규제 완화
-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간 모든 건축물에 고효율조명기기 사용 의무화를 위한 건교부 고시 개정 문제

-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간 경차보급 촉진을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 문제
- 산업자원부와 환경부간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 개정 문제

□ 調整經過 및 調整結果

- '98.6월부터 금년 8월 현재까지 총15차례의 기후변화협약실무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기후변화협약 관련 부처간 쟁점사항을 조정하고, 세부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전문가 의견수렴 및 수정·보완중
- 국무조정실이 총괄적 역할차원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세부시책 시행계획(안)을 검토, 조정, 대안 마련토록 용역을 의뢰
 - 용역기간내 진척사항과 정책조정 필요사항을 기후변화실무대책회의에 상정하여 토의·조정

醫療用 放射性 發生裝置 管理業務 調整

□ 推進背景

-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치료용,진단용)의 관리가 이원화(치료용:과기부, 진단용:복지부(식약청))되어 사용자에게 중복관리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 달라는 감사원의 통보(1999.5.19)에 따라 조정 착수
 - 피폭판독사업자에 대한 중복규제도 조정 필요

□ 爭點事項

- 과기부 :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측면에서 진단용도 원자력법 체계내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복지부(식약청)는 원자력법의 위임·위탁을 받아 실제관리 업무를 수행함이 타당함
 - 피폭판독사업자는 과기부가 원자력법에 의거, 허가토록하고 있고, 이중에서 복지부가 4개기관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므로 원자력법에 의한 관리 필요
- 복지부(식약청): 진단용뿐만 아니라 치료용도 병원에서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바 국민의료건강 차원에서 당연히 의료법으로 관리 되어야 함

□ 調整經過

- 제1차 업무조정회의 개최: 1999.6.8 산업심의원 주재 관계부처 과장급 회의개최

- 제2차 업무조정회의 개최: 1999.7.19 경제조정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급 및 이해단체(협회등) 책임자 회의 개최
- 제3차 업무조정회의 개최: 1999.7.22 산업심의관주재로 관계 부처 과장급 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치료용과 진단용발생장치는 장치의 특성상 과기부와 복지부(식약청)가 2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동일한 장치가 중복으로 관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해당기관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함
- 피폭판독사업자에 대한 검사는 과기부로 일원화하고, 안전 관리책임자도 과기부규정에 따라 1인만 지정함, 그리고 피폭데이터 관리 효율화를 위해 데이터를 상호 공유토록 협조함
- 상기결과에 따라 과기부,복지부,식약청은 관련규정 등을 개정토록 함
- 상기조정결과를 감사원에 통보('99.8.21)

□ 其他 特記事項

- 조정회의시 이해단체 참여시는 상호간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회의 진행상 뚜렷한 입장차로 인해 업무조정이 어려울 수 있음
- 조정회의 결과에 대한 완전한 합의도출을 위해 과장급 재협의회시 조정문안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내용 후속조치방안 까지 마련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하였음
 - 정보공유화가 가능토록 DB구축 등을 별도로 포함시킴

벤처금융 活性化 방안

□ 推進背景

-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97.10)」을 제정하여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불황 극복과 첨단산업 육성을 추진하였으나
- 벤처금융의 경직성과 파행적운영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벤처기업의 육성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 관련기관간 협의를 거쳐 유망벤처기업의 창업단계부터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까지의 벤처금융부문의 업무개선계획을 수립

□ 調整經過

- 제1차 회의 : ‘98. 5.25 산업심의관(주재)로 관련기관회의 개최
- 제2차 회의 : ‘98. 5.28 경제행정조정관(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급 및 관련기관회의 개최

□ 調整結果(업무개선방안)

- 벤처금융사의 투자비율 확대
 - 투자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금융사별로 투자목표비율을 정하며 각 부처는 소관 벤처금융사가 투자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지도
 -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KTB)와 신기술금융3사는 「투자실명제」를 조속히 시행

- KTB와 신기술 금융3사는 융자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요구를 점차 지양하고 자체심사만으로 결정
- 현재 KTB 자본금확충의 장애요인인 정부이외의 자에 대한 7% 이상의 지분제한조항의 재검토
-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종별 전문화를 유도
- 지난 '97.11월 발표한 “KOSDAQ시장 활성화 방안” 중 미결사항을 조속히 완료

中・大型 컴퓨터 重複開發 防止

□ 推進背景

- 정통부와 산자부가 '91년과 '93년부터 각각 추진하여 온 「제1단계」 사업은 중복개발(감사원 지적사항)
- 98년부터 추진예정인 「2단계사업」의 경우 산자부와 정통부가 공동개발을 모색하였으나 합의가 어려워 조정을 추진

□ 爭點事項

- 산자부 : 관련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산자부의 역할 확대, 중복개발방지를 위해서는 양 부처가 공동주관 필요
- 정통부 : 컴퓨터 개발사업은 정통부의 고유권한임

□ 調整經過

- 1998. 7.20 산업심의회 주재로 관계부처 및 연구개발책임자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중・대형 컴퓨터개발은 정통부로 일원화 함
 - 산자부는 중・대형컴퓨터 개발사업을 종료

□ 其他 特記事項

-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착수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중복을 방지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를 막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더욱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임

京釜高速鐵道 事業計劃 調整關聯

□ 推進背景

- 97년말 경제사정 악화로 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논란 심화
 - 92.6,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 착공
 - 97.9, 노선변경 등 변동요인을 반영한 사업계획 변경(안) 마련
 - 97.11, 변경안 협의중에 외환위기 발생 등으로 재검토 문제 제기

□ 爭點事項

- 감사원 감사('97.7~12) 결과발표('98.4.3)
 - 경제난으로 재원조달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정확한 사업성 분석 등 사업계획의 재검토 필요

□ 調整經過

- 98.4.8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 調整結果

- 건설교통부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한 후
 - 전문가의 평가·자문을 거치고 '98.7월까지 사회간접자본 건설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여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其他 特記事項

- 98.7.31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에서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 1단계(~2004.4) : 서울~대구간 고속철도 신선건설, 대구~부산간 및 대전·대구시내 구간 기존선 전철화(12조 3,377억원)
 - 2단계(2004~2010) : 대구~부산 및 대전·대구 시내구간 신선 건설

始華干潟地 管理對策 調整

□ 推進背景

- 시화방조제(12.6km) 건설로 조성된 간석지에 대해 쓰레기 불법방치, 산발적인 개발요구 등이 있어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대두
- 구체적 관리방안에 관한 건교부와 농림부간의 이견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 '94.1.24, 방조제 건설로 간석지 3,090만평 (북측 361, 남측 2,729) 조성

□ 爭點事項

- 농림부 : 시화방조제 건설공사 당시 계획대로 1,510만평을 농업용지로 활용
- 건교부 : 농지조성면적을 850만평으로 축소

□ 調整經過

- '98.6.26, 경제조정관 주재로 관계부처국장급 조정회의 개최
- '98.7.11,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調整結果

- 농업용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시화간석지 총 3,090만평중 남측의 1,100만평(36%)만 농업용지로 지정, 개발하고
- 나머지 1,990만평(64%, 남측 1,629, 북측 361)은 반월특수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함

□ 其他 特記事項

- 조정결과에 따라 건교부에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98.11.10 반월특수지역 확대지정 고시

自動車 LPG 使用制限의 法的根據 마련

□ 推進背景

- 유류의 수급조절 및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 없이 건교부고시(‘75)로 자동차의 LPG 사용을 제한하여 왔으나
- 99.3.1일부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모든 규제가 자동폐지되게 됨에 따라(행정규제기본법) LPG 사용대상 자동차 제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

□ 爭點事項

- 자동차의 LPG 사용을 제한할 법적근거 및 주관부처에 관해 이견
 - 건교부 : LPG 사용 자동차의 제한은 자동차 엔진구조 또는 안전과는 관계없는 유류의 수급조절 및 세수확보 차원의 규제이므로 산자부 또는 재정부에서 관장함이 타당
 - 산자부 : 에너지 수급상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제한은 곤란
 - 재정부 : 조세법에 LPG 사용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국민정서상 곤란

□ 調整經過

- 98.10.30 경제조정관 주재 관계부처회의)

□ 調整結果

- 산자부 주관으로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에 의해 LPG 사용자동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

□ 其他 特記事項

- ‘99.2.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개정·공포

麗川工團 周邊마을 移住對策 推進

□ 推進背景

- 여천공단의 본격 가동('80년)이후 각종 안전사고와 소음·공해 등을 이유로 공단주변마을 이주대책을 지속 요구

□ 爭點事項

- 기획예산처
 - 이주대책을 추진할 경우 여타 공단 주변마을의 유사한 이전요구로 막대한 국고재원의 소요 증대가 우려되므로 국고지원 불가
- 건교부·환경부·산자부·행자부 등 관계부처
 - 법적근거 미비, 국고지원 방침 미확정 등을 이유로 사업주관 회피

□ 調整經過

- 97.11.6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차관회의 결과
 - 시행주체는 지자체로 하고 기본설계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 지급
 - 재원분담 방안과 주관부서는 추후 조정
- 98.5 기본설계용역결과를 토대로 이주대책 요구 (여수시)
 - 1,671세대(6,013명), 51만평, 3,004억원 (국고지원 1,145억원)
- 98.9~10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2회)
- 99.6.11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調整結果

- 다른 산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산업단지 구역이었으나 제척된 지역(23만평)에 한해 건교부 주관으로 산업단지(국고)로 개발하고 기타 지역(28만평)은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
- 산업단지개발 실시설계비 등 사업비 일부를 2000년 예산에 반영

外國人 土地取得節次 改善

□ 推進背景

- 외국인 토지법의 개정·시행('98.6.26)으로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전면 허용되었으나, 후속조치 미흡으로 외국인 토지취득이 크게 제한
 - 토지취득 등기시에 필요한 등록번호와 관련하여 비거주 외국인과 비등록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출입국관리소(목동)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 비등록 외국법인의 경우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이 불완전하여 일선 시·군·구에서 등록번호 발급을 기피하고 있고(법인의 실체확인 곤란),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는 토지취득신고필증을 구비서류로 요구함으로써 절차가 지연되는 등 법개정의 효과가 반감

□ 調整經過

- 98.8.8 농수산건설심의관 주재 조정회의)

□ 調整結果

- 비등록 외국법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행정처리지침」으로 시·군·구에 조속히 시달(행자부)
- 비거주 외국인에 대하여는 토지취득 신고전이라도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추진 (법무부)

□ 其他 特記事項

- 98.8.26 비등록 외국법인 등의 등록번호 부여요령 시달(행자부)
- 「법인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추진('99.8말 현재 법제처 심사중)
- ※ 토지시장 개방이후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98.6.26 ~ 99.6.30)
 - 3,182건 714만평(여의도 면적의 약8배, 개방전의 4배 이상)

農家負債對策 調整

□ 推進背景

-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의 상환 수요가 집중도래함에 따라 농가의 자금상환 부담 완화 필요
- 재정여건, 부채상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채대책 규모를 설정할 필요

□ 爭點事項

- 농림부 : 부채대책비 규모를 2조원으로 함
- 재정부 : 재정부담은 3,000억원 이상 불가, 이자율 경감 불가

□ 調整經過

- 98.9.12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調整結果

- 부채대책비 규모는 1조5천억원으로 함(정부재정 4,000억원, 농·축협자금 1조1,000억원), 이차보전 715억원은 재정지원
- 부채대책비 지원 금리 6.5% → 5.0% 인하는 수용 불가
 - ※ 정책자금 및 부채대책비 지원 금리는 '99.7월까지 2차에 걸쳐 최종 5.0%로 조정

□ 社會文化調整官室 □

都市露宿者 保護對策 支援・調整

□ 推進背景

- 노숙자의 증가로 생계형 범죄의 발생, 가정파괴 등의 사회적 문제가 빈번히 제기되고 있어 이들에게 실효성있는 자활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종합대책의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이를 지원・조정

□ 爭點事項(營業實態 및 問題點)

- 숙식장소 사용 및 시설설치 인・허가 편의제공, 강제단속실시 여부, 상담요원 지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원, 귀가 및 취업 지원 등 체계적・종합적인 대책마련

□ 調整經過

- '98. 3. 30 사회문화조정관주재 관계기관 국장회의 개최
- '98. 6. 9 사회복지수석비서관 주재 관계기관 국장회의 개최
- '98. 6. 12, 15 사회문화조정관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 개최

□ 調整結果

- 노숙자실태를 일제조사하여 종합적인 정부지원계획 수립
- 정부예산으로 무료급식소 운영단체에 급식비 지원, 숙식・급식장소 제공 및 의료구호 실시
- 노숙자를 실직자와 부랑인으로 분류, 부랑인은 시설보호, 실직자는 근로능력 및 연고를 고려하여 자활지원

□ 其他 特記事項

- 예비비 200억원을 확보하여 도시노숙자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함

食品接客業所 不法營業 및 業種區分 關聯 調整

□ 推進背景

-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업종구분 등 비현실적인 규제가 오히려 탈법·변태영업을 조장하고 단속공무원과 업소의 유착 등 비리가 정부의 신뢰성만 실추시켜 불법영업대책 및 업종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 대두

□ 爭點事項(營業實態 및 問題點)

- 현재 식품접객업계 전반에서 업종구별이 무색할 정도로 퇴·변태영업등 업태위반행위가 만연
 - 주류제공이 허용되지 않는 휴게음식점으로 허가 받은 업소가 주류판매 및 배달판매중 윤락행위를 하는 티켓영업 운영
 - 유흥주점외에 주류제공이 허용되는 업종 (단란주점·일반음식점)의 대다수가 해당업태에 부합한 영업허가 없이 접대부를 두고 퇴폐·변태 유흥영업을 운영
- ※ '97년도 위반건수가 총 71,990건으로 전체업소대비 12%이며, 이중 업태위반 5,530건, 미성년자 출입 5,886건, 퇴폐영업 3,065건, 시간외 영업등 기타 57,509건임
- 이러한 현상은 90년이후 서울등 대부분지역에서 유흥주점의 신규허가가 금지되므로써 일반음식점·단란주점등의 변태영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임
 - ※ 지난 90년이후 유흥주점의 신규허가금지. 단, 인천·광주·대전·경기·전북·전남등 6개 시·도는 '92년 이후 신규허가

- 동시에 '95년 민선지방자치단체 출범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단속의지가 약화된 것이 큰 원인임

※ 1개업소당 단속실적 : '94년 3.8회 → '97년 1.4회

□ 調整經過

- '98. 6. 15 복지심의관주재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
- '98. 6. 26 유해업소 미성년자 보호대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 '98. 7. 13 사회문화조정관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업종조정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다른 문제만 야기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업종구분은 현행대로 두기로 하고 관련제도 개선등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로 함
 - 업계의 자율정화 유도방안 강구
 -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벌칙) 강화
 - 불법영업시설·장소에 대한 원천적인 재발방지장치 마련
 - 청소년 유해행위 및 퇴·변태업소 단속강화
 - 장기적으로 유흥주점 영업허가 제한완화

□ 其他 特記事項

-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에 반영

按摩士生計支援對策 關聯 調整

□ 推進背景

- IMF 체제하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아울러 안마권 수호에 관한 민원해결을 요청함에 따라 조정 필요

□ 調整經過

- 98. 5. 4, 사회문화조정관 주재로 관계부처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안마시술소에 대한 상·하수도료 인하(행정자치부, 환경부)
 - ‘법령(의료법·안마사에관한규칙)기준내의 안마시술소’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체계를 ‘현행 옥탕2종 → 영업용’으로 조정
- 안마시술소에 대한 종합소득세 표준소득율 인하(국세청)
 -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에 의한 「연도별표준소득율」 중 ‘차등률(경감률)’ 적용제외 대상에서 「안마시술소」를 삭제
 - 99년도 표준소득율 제정시 대한안마사협회 건의를 참작하여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 불법 퇴폐적 안마행위 척결 (대검찰청, 경찰청)
 -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단속 강화

亞・太 障礙人競技大會 關聯 調整

□ 推進背景

- 제8회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를 2002년 부산아시안 게임과 동반개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시가 지방비부담분을 전액 국고지원토록 요청하는 등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간에 이견이 있어 조정필요

□ 調整經過

- 98. 4. 24 사회문화조정관 주재로 관련기관 국장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중앙정부와 부산시가 각각 30억원씩 부담
- 대회조직위가 자체수입으로 60억원을 조달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부족분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

□ 其他 特記事項

- 조정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동 대회 유치방침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98. 5. 26)

醫療紛爭調整法 制定關聯 調整

□ 推進背景

-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증가하면서 의료분쟁이 빈발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
- 이에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와 배상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동 법안 제정 추진
- 동 법안은 금년 정기국회 상정목표로 추진중이나 관계부처간 이견을 보임에 따라 조정 필요

□ 調整經過

- 94. 11 정부법안 국회 제출
- 96. 2 국회 심의과정에서 ‘무과실보상제도’도입 논란으로 성안되지 못하고 제14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 96. 7~10 복지부에서 수정안 마련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 법무부의 이견으로 차관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보류
- 97. 7. 9 의료개혁위원회에서 ‘효과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 정립’ 건의
 - ☞ ‘97. 7 김병태 의원외 30인 「의료분쟁조정법(안)」 제출
 - ‘97.11 정의화 의원외 37인 「의료분쟁조정법(안)」 제출
- 98. 7~9 복지부에서 재입법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 예고중 (9. 4~9. 25)

□ 爭點事項

①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문제

-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둠

법무부 의견	행자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조사 전담기구 설치 - 현재 의료심사 조정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것은 원인규명이 안되고 신뢰성이 없기 때문임 - 공정한 사실조사를 위해 복지부에 사고조사 전담기구를 두거나 별도 독립법인을 설치함이 바람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기구 설치 곤란 - 사실조사는 기존 복지부 기능으로 수행하고 사무기구 설치의 향후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아 설치 검토 ※ '91~'97 운영실적 : 13건 접수 2건 조정

* 국내 입법례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환경부에 중앙조정위원회, 시·도에 지방조정위원회를 둠 (사무국 설치)

【檢討意見】 의료사고 분쟁조정은 공정한 사실조사가 관건이므로 사무국을 설치하되 외부전문가 활용체제를 갖추는 등 최소인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의료분쟁조정기구를 독립법인화 하는 방안 검토

②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전치주의

- 원칙적으로 이 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제기 불가

법무부 의견	복지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인간의 분쟁에 관해 종국적인 해결기관은 법원이며 분쟁 당사자들은 공정하고 자격 있는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음 -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게 함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여지가 많아 위헌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는 의료분쟁의 전문적 심사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필수 불가결함 ※ '94년 정부안 제출시에는 조정전치주의에 대한 법무부 이견이 없었음

【檢討意見】 조정전치주의제도는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므로 위헌소지

③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의무화 문제

- 의료인단체 및 의료기관단체는 의료행위 또는 혈액관리로 인한 피해배상을 위해 공동으로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의료배상 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하여야 함
-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공제조합이 정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함

공정거래위원회 의견	복지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의 설립여부는 사업자가 그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경제적으로 민간보험시장을 위축할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무화 불가피

【檢討意見】 의료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제약하고, 손해배상 보험의 발전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대안이 아님

④ 의료인 등에 형사처벌 특례

-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이 책임공제에 가입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 불가, 중합공제에 가입한 경우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공소제기 불가
- 공제조합에 가입한 의료관계 종사자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그 행위가 불가피하고 의료관계 종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 형을 경감 또는 면제

법무부 의견	복지부 · 의료계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反意思不罰罪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고 범죄주체에 따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행위 자체가 일반화된 것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의무행위는 특히 실무적인 측면에서 과실 형태를 유형화 · 체계화 하기 어려움 - 산업현장의 위험업무 종사자와의 균형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에 대하여만 예외를 인정함은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 소지 - 현행법상 의료사고에 따른 입증책임은 환자측에 있으며, 공소제기 마저 공제 조합 가입을 이유로 제한함은 부당 단, 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처벌 특례조항은 방어진료, 의료사고 위험이 큰 분야의 진료기피 등 의료의 왜곡현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 - 동 조항이 제외될 경우 의료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

【檢討意見】 형사처벌 특례조항은 의사 등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평상 문제가 있으며, 과실유형을 체계화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적용이 사실상 어려움

□ 調整結果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이견으로 복지부 법안대로 입법추진은 어려움
- 상기 주요쟁점사항은 동 법안의 핵심사항으로 복지부 법안대로 입법되지 못할 경우 동 법안의 제정의미는 사실상 없음

⇒ 복지부에서 동 법안 제정을 재검토토록 조치

醫療機關 信用卡使用關聯 調整

□ 推進背景

- 98. 12 所得稅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국세청에서 소매업·음식업 등과 같이 「병원」도 신용카드 가입대상 업종으로 지정할 계획
- 구체적인 시행방안 및 시기에 관하여 국세청과 보건복지부간의 이견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의료기관 신용카드 사용현황 》

(자료 : 보건복지부)

조사대상 병원			사 용 병 원		
계	국공립	민 간	계	국공립	민 간
441	80	361	142 (32.2%)	31 (38.8%)	111 (30.7%)

활 용 율 (3차의료기관, '97년)	총 진료비 대비 2.4% (최고 8.3%)	총 진료건수 대비 0.5% (최고 3.7%)
-------------------------	----------------------------	-----------------------------

※ '98. 9월 현재 전국 100병상 이상 441개 병원 조사

《 세법개정 현황 》

-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98. 12)
 -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 가맹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실시

○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 ('98. 12)

- 신용카드 가맹대상 업종을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으로 명시

□ 爭點事項

《 국세청 계획 》

- 「병원」을 신용카드 가맹대상 업종으로 지정·고시할 계획 (99년 2월 예정)
- 99. 3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을 적극 지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실시계획
 - 소매업·음식·숙박업 등 타업종과의 형평상 병원만 제외 곤란
 - 신용카드 가맹을 하더라도 카드활용율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

《 관계기관 의견 》

< 보건복지부 >

- 의료기관을 신용카드 가맹업종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2000. 1. 1 이후에 하되, 우선 병원급 이상 응급실은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지도
 - 정부에 의한 의료보험수가 결정으로 신용카드사용 수수료 부담을 가격에 반영할 수 없음
 - 2000. 1. 1부터 의료보험수가는 원칙적으로 보험자와 의약단체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므로 수용 가능

○ 병·의원의 심각한 경영난으로 수수료 부담시 병원도산
가속화 우려

- 추가수수료 부담 : 100% 카드이용시 900억원 추정
※ IMF 이후 병원 53개소, 의원 3,393개소 휴·폐업

< 대한병원협회 >

○ 신용카드 가맹대상 업종에서 제외 요망

- 다만, 국민편의 차원에서 응급실의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

○ 국민편의를 위해 부득이 가입대상업종으로 포함시킬 경우

- 의료보험수가 인상 또는 의료보험 적립금에서 보전, 국고지원·
신용카드수수료 사용자부담 등 별도대안 마련 요망

< 전국은행연합회·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 >

○ 신용카드사의 원가는 2.4%~2.5% 수준으로 현행 종합병원
가맹점수수료율 1.5%는 원가이하로 당장에 추가인하는
어려운 실정

- 외국의 예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 신용카드사의 카드거
래 조건이 열악

가맹점 수수료 현황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

카드사명	수 수 료 율 (단위 : %)					
	병 원		한의원	약 국	일반·휴게음식	유흥주점
	종합병원	일반병원				
비씨카드	1.5	3~4	4	3	3	5
국민카드	1.5	2.5				
외환카드	1.5	3~4				
엘지카드	1.5	3~4				
삼성카드	1.5	3~4				

※ 종합병원 : 진료과목 8개이상, 병상수 80개 이상으로 병원협회에 등록된 병원

※ 한의원, 약국, 일반·휴게음식, 유흥주점은 비씨카드사 가맹점수수료율임

주요국의 종합병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율 비교

국 명	가맹점수수료율 (%)	대금지급 주기
미 국	2.9	3일
영 국	3.45 3.95	월 1회 주 1회
일 본	3	월 2회
호 주	3.15~3.75	N / A
한 국	1.5	2~3일

- 따라서 신용카드사에서도 최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종합병원의 경우 가맹확대에 소극적이며
 - 종합병원 입장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카드수납을 거부하거나 카드수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
- 다만 앞으로 의료기관 신용카드 이용이 확대될 경우 카드사에서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비용최소화를 위해 적극노력해 나갈 계획임

□ 調整經過

- 99. 2. 18. 복지심의관 주재로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개최

□ 調整結果

- 국세청 계획대로 「병원」을 신용카드 가입대상 업종으로 지정토록 함

- 병원협회에서는 「병원」의 신용카드 가맹을 적극 지도해 나가되
 - 특히 카드사용 관련 민원이 되고있는 병원급 이상 응급실 운영, 의료보험 비급여 의료행위가 많은 의료기관이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함
- 보건복지부에서는 200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의료수가 제도에서 신용카드 가맹에 따른 추가비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함
- 전국은행연합회·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도 카드사용 업종확대에 따라 수수료율 인하 등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함

剩餘食品活性化支援・調整

□ 推進背景

- 불우이웃에 대한 잉여식품 나누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이를 지원・조정

□ 爭點事項

- 잉여식품나누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탁음식물에 대한 세제상 혜택부여, 기탁후의 식품관리문제, 기탁자 민・형사상 면책방안 등의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

□ 調整經過

- '98. 9. 14 (月) 복지심의관주재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

□ 調整結果

- 현재 여성복지연합회와 대한성공회 등의 민간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Food Bank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추진체계 정비 및 지원방안 마련(복지부)

⇒ 전국 푸드뱅크 네트워크 구성, Food Bank 전용 특수전화 (1377) 설치, 기탁자 명단 및 업적 정기홍보, 안전취식 등 Food Bank 운영기본사항 정립 및 참여활성화

※ 9.17부터 Food Bank 특수전화를 개설・운영하고 사업활성화 교재를 각 시・도에 배포

※ 관계부처에도 Food Bank 사업과 관련 협조공문 발송토록 조치

○ ‘Food Bank 기탁식품 전량 손비인정’ 법제화 추진(재정부)

⇒ 세무행정상 원가확인이 용이하고 유통기한이 표시된 가공식품(포장식품 등)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인 법인세법개정(안)에 반영을 적극검토

- 법인인 기탁업체(식품유통회사)가 사회복지법인 및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기탁한 식품에 한정

※ 호텔 등의 조리식품, 농수산물 등은 원가산정의 곤란으로 향후검토

○ 호텔의 뷔페·연회식당 등의 잉여조리식품 기탁촉진방안 강구
(문화관광부)

⇒ 경기침체에 따른 업계의 식자재 적량관리강화로 잉여식품 발생이 많지 않으나 관련업계를 독려하여 적극참여토록 협조

○ ‘물류센터 잉여농산물 기탁’ 적극독려(농림부)

⇒ 현재 개장된 2개소(창동·양재동)와 추가개장 물류센터의 “속박이 한 것, 취식가능하나 판매곤란품” 등의 잉여농산물을 적극기탁토록 협조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일반도매시장에 대하여도 시장법인·중개인 등을 독려, 본 사업에 동참토록 적극 권유

※ 축산물의 경우에도 농림부에서 지원사항 검토

「癌센터」運營方案 關聯 調整

□ 推進背景

- 현재 건축중인 암센터의 운영주체, 운영방식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 대두

□ 爭點事項

< 보건복지부 >

- 국가암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암센터를 국립으로 운영
- 운영의 자율성과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화
 - 연구원장은 국내대학·의료기관의 암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하되 부속병원장 겸직
 - 암 연구부서(227명)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정원 확보
 - 부속병원(504명)은 상근사무인력(18명) 외에는 외주용역하고, 진료분야별로 권위있는 의료팀을 초빙하여 진료하는 개방형 병원으로 운영

< 행정자치부 >

- 우수 인재확보차원에서 책임운영기관은 문제가 있으므로 민간재단법인 또는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민간재단법인 또는 특수법인으로 하는 경우 복지부에 암관리 담당과를 신설하여 암관리 정책 및 지도·감독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기획예산처 >

- 기본적으로 기관장 등 운영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하며 책임 운영기관으로 할 경우 자율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민간재단법인 또는 특수법인설립이 바람직함

□ 調整經過

- 98. 11. 4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
- 98. 12. 30 국무조정실장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99. 6. 23 국무조정실장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운영방안 >

- 민간이 할 수 없는 연구기능 위주의 국립기관으로 육성
- 이를 위해 연구비 등 국고지원
- 연구요원은 민간인을 활용

< 기본방침 >

- 책임운영기관으로 하는 것은 우수 인력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 민법상 재단법인은 출연자금의 확보, 향후 암센터의 안정적 운영 등에서 제약이 있음
 - 암센터의 암연구 및 임상진료는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토록 하되
 - 국가적인 암정책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내에 암관리 담당과를 신설하여 담당토록 하고, 미국의 암관리법 (The National Cancer Act)에서와 같은 암관리위원회를 두는 방안 검토
- ※ 당정협조 및 국회설득 병행 추진

□ 其他 特記事項

- 국립암센터설치법(안)을 제정하여 현재 법제처 심사중

「健全家庭儀禮準則案」成年禮 適用對象年齡 調整

□ 推進背景

- 성년례를 행할 수 있는 자를 만18세 이상으로 하는 건전가정의례준칙(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간의 이견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爭點事項

《 보건복지부 》

- 성년례는 ‘성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주기 위한 禮(責成人之禮)’로서
 - 성년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연령이면 빠를수록 바람직 함
- 아동복지법상에 18세 미만의 자는 아동에 해당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 가정의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년례를 행할 수 있는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정하게 된 것임
- 朱子家禮에 의하면 남자는 15세~20세가 되면 冠禮를, 여자는 15세가 되면 笄禮를 통해 성년예식을 행하는 전통이 있었음
 - ※ 冠禮・笄禮 : 어른이 되는 예식으로 어른복식을 입히고, 남자는 冠, 여자는 쪽을 짓고 비녀를 꽂아 주는 의식절차임

《 법 제 처 》

- 이 준칙에서 ‘성년례’라 함은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행하는 의식절차이므로 반드시 민법상 성년규정과는 일치할 필요는 없음
- 정신적·육체적으로 보다 빨리 성숙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만20세 이하인 자에 대하여도 성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성년례의 대상연령을 하향 조정할 타당성이 있음

《 법 무 부 》

- 성년례를 행함에 있어 ‘성년’이라 함은 법규상 완전한 인격체로서의 성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민법상의 연령으로 성년의 기준을 삼아야 함
 - 성년의 개념과 기준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은 민법이 유일하며 민법상 성년은 만 20세임
 - ※ 민법 개정과 관련하여 성년의 나이를 18세로 낮추자는 의견이 있으나 정책적인 결정사항으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음
 - 관계법규상의 연령규정은 각기 다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령에 불과함
- 따라서 민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년례는 만20세가 되는 해에 한다”로 규정함이 타당

《 교육부 · 청소년보호위원회 》

- 성년례를 만 18세 이상으로 할 경우 많은 인원이 고교재학중
이므로 보호대상인 청소년들이 성년례를 통해 성인이라는
인식을 갖게 됨에 따라 자칫 탈선의 계기가 될 우려가 있음

※ 우리나라 고교3학년생 연령별 분포현황

(’98. 10. 1 기준, 교육부 자료)

구 분	인 원	비 율
17세 이하	382,778명	50%
18세	351,853명	46%
19세 이상	31,018명	4%
계	765,649명	100%

- 청소년보호법 등 각종 법령상의 청소년보호 연령도 제5차
규제개혁 확정과제(’98. 6. 5)에 의거 ‘19세 미만’으로 통일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준칙안도 이에 따르는 것이 보다 타당함

□ 調整經過

- ’99. 8. 19(木) 사회문화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성년례는 만 19세가 되는 때부터 행할 수 있다(건전가정의례
준칙안 제5조규정 수정)
 - 건전가정의례준칙안에서 ‘성년례’라 함은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행하는 의식절차임
 - 청소년보호연령은 19세 미만이고, 사회적 활동은 19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현실을 반영함

社會福祉專門要員 一般職 轉換問題 調整結果

□ 推進背景

- 현재 별정직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우수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할 필요성 대두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간의 이견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爭點事項

< 보건복지부 >

- 기존 인력은 '99년중 일반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행자부의 자치단체별 정원책정 및 인사지침 시달 요망
- 별정직으로 임용되어 승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동일직급에서 장기간 근무함에 따른 사기저하문제 해소

< 일반직(사회복지직렬)과 별정직 비교 >

구 분	일반직(사회복지 직렬)	별 정 직
신규임용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 공개경쟁 임용 → 우수인력 확보 가능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 → 신규임용은 공개경쟁 임용하였으나, 결원보충은 인사권자의 자의적 개입이 가능
신 분	보 장	불 안 정
전 보	직렬간 가능	제 한 (자치단체간 전출 불가)
승 진	기회 제공	불 가 능

- 99년 하반기 사회복지전문요원(1,200명) 충원계획도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사회복지직렬)으로 충원 요망

< 행정자치부 >

- 일반직화 후에도 전문요원 인건비에 대한 지속적인 국고지원 보장 필요

※ '99. 4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 국고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나, 행자부에서는 동 규정이 임의조항이라는 이유로 강행규정으로 재개정 하거나 기획예산처에서 공문으로 국고지원을 확약해 줄 것을 요구

- 99년 하반기 사회복지전문요원 충원계획은 우선 별정직 8급으로 충원후에, 기타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문제와 관련하여 신중 검토계획

< 기획예산처 >

- 일반직 직렬전환시에도 인건비 국고지원 계속 가능

※ 별도공문으로 국고지원을 확약하는 것은 곤란

□ 推進經過

- '98. 12월 사회문화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 개최
- '99. 8. 5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調整結果

- 행정자치부는 현재 별정직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사회복지직렬) 전환을 추진하고, '99년도 채용인원(1,200명)도 일반직(사회복지직렬)으로 임용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2001년 시행에 대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정비 필요

- 기획예산처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사회복지직렬)으로 전환되더라도 현재의 보조기준(보조율 : 서울 50%, 지방 80%)대로 인건비를 계속해서 국고지원함

自營者 所得把握 方案 마련

□ 推進背景

- 국민연금을 도시지역주민에게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자영자의 소득불성실 신고문제가 제기됨
- 자영자소득의 정확한 파악은 조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적정하게 부과하는 데 필요함

□ 調整經過

- '99.3.4 국무총리께서 201회 임시국회에서 “총리실 산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답변함
- '99.3.24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와 관련하여 7개 시민·노동단체 대표와 조찬 간담회(총리 주재)를 가짐
- '99.4.2 제3차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산하에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함

□ 調整結果

- '99.8.2 그동안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작성한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총리께 보고함
- 정책건의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별로 충분히 검토·협의를 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실천토록 조치

□ 其他 特記事項

- 관계법령의 조속한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99년 정기국회에서 추진중
- 2000년 1단계 소득파악방안을 평가하고, 국세청 세정개혁과 연계된 종합적인 소득파악 방안 마련

【별 첨】

政策建議案 主要內容

① 實際所得을 正確하게 把握하기 위하여

○ 소득과약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 정부부서에서 갖고있는 소득과약을 위해 필수적인 모든 소득 및 과세관련정보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과세자료수집및관리에관한특례법」을 특별법으로 제정
-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으로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국세청이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여 요구할 시 제공토록하는 방안 강구
- 국세청은 소득관련 자료를 개별 자영자별로 통합관리하되 사회보험 기관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전산능력을 확충
- 아울러 소득세 부과시점과 각종 사회보험료의 부과시기를 최대한 접근시켜 부과대상 소득의 일관성을 유지

○ 소득과약을 위한 세제개혁 및 세정개선

- 부가가치세제는 일반과세 위주로 단계적 개편
 - 2000년부터 간이과세제도를 우선 폐지하고 과세특례대상자는 간이과세방식으로 전환하되, 조속한 시일내에 간이과세제도도 폐지

- 기장제도와 신고납부제도의 정착 및 표준소득률제도 단계적 폐지
 - 기장에 근거한 세무신고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무기장자를 기장자로 전환하고, 간편장부기장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장부 보존기간을 연장(5년→7년)
 -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
- 신용카드·직불카드 거래 활성화, 정규영수증 주고받기 등을 통해 모든 상거래를 투명화
- 세무조사와 조세범 처벌을 강화
 - 세무조사는 성실납부를 유도하는 고유의 기능으로만 사용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불신 해소
 - 세무조사비용을 선진국 수준(1~2%)으로 대폭 높임
 -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가산세제도를 정비
- 세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득자료 공개
 - 연간 통계자료에 업종·직업별 신고소득규모, 소득계층별 분포자료 공개
 - 세무조사 결과 등에 대한 자료 주기적 공개
 - 개별신고자료는 납세자 신원을 삭제하고 일정비율을 표본추출하여 공개하는 방안 검토

② 社會保險料를 衡平性있게 賦課하기 위하여

- 조세와 국민연금·의료보험에 있어 제반 소득의 개념을 통일하고 부과기준소득의 범위를 조정
- 기본적으로 사회보험료를 국세청 소득자료를 기초로 한 부과체계를 마련

- 소득과악인프라 구축 이전까지는 주된 소득(피용자는 근로 소득, 자영자는 사업소득, 금융소득이 주된 소득자는 금융소득 등)에만 부과하되
 - 한시적으로 과세소득, 재산, 자동차, 금융자산소득, 업종, 종업원 수, 입지조건 등 실제소득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수용성 있는 소득추정방안을 개발
 - 특히 하향신고가 문제되는 고소득 전문직 자영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반과세로 적용받게 하고, 기장을 의무화하며
 - 타 업종 보다 높은 비율로 세무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금액 및 소득규모를 직종별로 공개하며, 세무조사시에는 대상자 수·추징금액을 공개하는 등 성실신고 유도
- 현재 지역가입자로 관리되고 있는 4인이하 사업장근로자 및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의 직장가입자 편입을 단계적으로 추진
 - 영세사업장근로자의 경우 법인사업장·고용보험사업장 등 고용관계가 안정되고 보험료 부담 수용성이 높은 대상집단부터 단계적으로 직장가입자로 편입
 - 임시직·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사업체의 형태와 고용관계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직장가입자로 편입
 - 사업장가입자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영세사업장근로자 등은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의 중간형태로 자격관리하는 방안 강구
 - 사회보험카드 또는 사회보험통장을 도입하여 근로자가 사업주의 신고와는 별도로 가입신고 하는 방안 등

國民年金 補完對策 推進

□ 推進背景

- 국민연금을 도시지역주민에게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소득하향신고로 내년 신규 연금수급권자의 연금액이 감소, 납부예외자가 절반을 넘고, 5인미만 영세사업장근로자, 임시직·일용직 등은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함
- 일부 언론·시민단체에서 현행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요구함

□ 調整經過

- '99.2.27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연금 확대실시 방침 재확인하며 보완대책 지시
- '99.3.19 사회문화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 개최
- '99.5.21 국무총리 주재 국민연금제도 관계부처 회의 개최

□ 調整結果

- 국민 불편 해소
 - 증빙서류 제출 면제하고 추후 사실 확인
 - 휴·폐업, 실직자, 학생·군인 등 납부예외자를 노동부·교육부·병무청 등과 협조하여 직권납부예외 조치
 - 신고권장소득은 소득신고에 참고토록 제시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홍보
 - 소득신고기간을 연장(3.13 → 4.15)하고, 소득신고방법을 전화·FAX 등 다양화

- 국세청의 '98년도 종합소득자료를 예정보다 빨리 8월말까지 자료 협조토록 조치
-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보완대책을 지속 추진
 - 보험료 상향조정을 위한 홍보·설득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연금수급액 손실분이 발생하는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 강구
 - '99. 9월말로 납부예외기간이 만료되는 납부예외자(약 370만명) 및 미신고자 관리대책 강구중
 - 5인미만 사업장 및 임시직·일용직근로자의 직장가입자 단계적 편입 추진
- ※ '99.4.2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자영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설치 운영중

□ 其他 特記事項

- '99.8.17 현재 도시지역 전체 소득신고자 3,917천명 중 9.1%인 360천명이 소득상향조정(1인당 평균 35만원)
- '99.8.10 현재 도시지역가입자 납기내 보험료 납부율은 금액기준 65.1%로 4~6월분(60%~62.8%)에 비해 다소 증가함
 - 자동이체율은 44.3%로 최초 29.7%보다 14.6% 증가
- '98.10.1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공·사연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사연금제도개선 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중

2002年 월드컵 主競技場 選定・支援

□ 推進背景

- '97. 9월 국무총리 주재 월드컵지원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주경기장 후보지는 서울시가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키로 하고, 서울시에서는 '97. 10 서울 상암지구에 신축키로 결정
- '98. 2월 국민의 정부에서는 IMF체제하의 경제난을 고려하여 월드컵 주경기장 신축안에 대해 재검토키로 함

□ 爭點事項

- 기존의 잠실 종합운동장을 개·보수하여 활용 가능한지, 건축 중인 인천 문학경기장을 증축하여 활용 가능한지 또는 기 결정된 상암지구에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 3개 대안에 대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 調整經過

- '98. 4. 8 국무총리주재 월드컵 지원 대책회의
- '98. 4. 17 "
- '98. 5. 6 "

※ 회의참석자 : 문화부장관, 기획예산위원장, 서울·인천시장
사회복지수석, 월드컵조직위원장, 축구협회장 등

□ 調整結果

- 상암지구에 월드컵 주경기장을 신축하기로 결정
 - 총사업비 2,000억원중 국고 30%, 서울시 30%, 민자등 40%를 분담하기로 결정

觀光出國納付金制度 改善(失業基金 使用方案 등)

□ 推進背景

- 관광산업 기반조성 재원 확보를 위해 '97년 7월 1일부터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1인당 1만원의 관광출국납부금을 징수해 왔으나, “관광목적의 해외여행자”를 구별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징수과정에서 분쟁을 야기하고 또한 공항시설이용료와 별도 징수함에 따른 불편이 제기됨
- 징수대상을 확대하되 재원의 일부를 실업대책으로 사용하는 방안검토

□ 爭點事項

- 노동부 : 실업자 대책비를 해외 출국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고, 외국인의 경우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 문화부 : 실업과 관련이 없는 출국자에게 실업대책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납부자 반발예상

□ 調整經過

- '98. 3. 31 사회문화조정관 주재로 관계부처국장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관광출국납부금 부과대상을 전체 출국자로 확대하되, 그중 50% 를 3년간 관광관련 실업사업에 사용
- 징수방법을 공항이용료와 통합 징수토록 개선

□ 其他 特記事項

-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진흥법 개정, '98. 11부터 시행 (출국납부금의 30%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입법과정에서 조정)
- '98. 11 ~ '99. 6 까지 177억을 징수하여 53억을 실업기금으로 출연

出版業界 支援 對策

□ 推進背景

- IMF 경제체제하에 출판업계의 경영난과 대형서적 도매상의 잇단 부도위기로 지식·문화산업의 기반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대책마련의 필요성 대두

□ 爭點事項

- 재정부 : 금융기관 산업자금 융자 (300억원)
- 행자부 : 공공도서관(시·도서관) 도서구입 예산조기 집행('97년/62억원)
- 교육부 : 전국대학도서관 도서구입('97년/1,083억원)
- 중기청 : “중소기업회생특례지원자금” 지원대상 요건 완화(10인→5인)

□ 調整經過

- '98. 3. 16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출판계에 문예진흥기금 200억원 긴급 지원
- 금융기관의 산업자금 300억원 융자
-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예산 조기집행 등의 단기대책과 출판·유통 합리화 기반 구축을 위한 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 조성
- 대형서점의 전국 체인화 등 중장기 대책을 수립

□ 其他 特記事項

- 우리실에서 추진상황의 지속적 점검 및 관계부처 독려

98 慶州 世界文化 EXPO支援 對策

□ 推進背景

- ‘98. 9. 10~11. 10 (2개월) 경북도 주최로 개최된 경주세계문화 EXPO가 행사장 기반시설비 부족,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행사비 부족 및 국내외홍보 관광객유치등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수립필요

□ 爭點事項

- 공보실 : 중앙홍보협의회 구성 운영
- 예산청, 행자부 : 예산조기 배정 및 부족분 특별교부세 지원 등
- 문화부 : 관광공사 및 해외문화홍보원에서 해외홍보지원, 경주권 관광호텔 확충 및 개선 지원 등
- 교육부 : 학생단체 견학코스 지정 등

□ 調整經過

- ‘98. 4. 23 교육문화심의관 주재 관계부처과장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98 국고보조금 조기 배정 및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 국내외 홍보·관광객 유치 적극 지원
- 문화예술행사를 경주에서 개최토록 지원
- 학생들의 단체관람 가능학교에 대해서 관람협조 요청 공문서 시달 등

골프장 宿泊施設 許容 및 取得稅 重課 緩和

□ 推進背景

- 외국 관광객 및 외국자본유치,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 골프장 숙박시설 설치허용 및 취득세 중과완화 필요성이 대두됨

□ 爭點事項

- 문화부 :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허용 및 골프장에 대해 일반세율의 7.5%인 취득세 중과 완화요구
- 환경부 :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에 대해 골프장 하류지역의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
- 행자부 : 내국인 취득시는 정책목적이나 국민정서상 중과완화 불가

□ 調整經過

- '98. 6. 26 교육문화심의관 주재로 관계부처 과장 조정회의 개최
- '98. 7 ~ '99. 2 사회문화조정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 조정회의 3회 개최

□ 調整結果

-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는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75실 이하의 한정된 규모로 설치 허용하고
-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는 향후 취득세 중과제도의 전면개편시 일반세율 또는 중간 수준으로 완화하도록 조정

觀光産業 振興對策 推進

□ 推進背景

- 관광수지 흑자로 경제난 극복에 기여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체계적 지원 필요

□ 爭點事項

- 재경부 :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외국인 이용분 등) 적용
- 복지부 : 특1급호텔 혼인예식업의 허용
- 건교부 등 :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건립 자유화
- 재경부 : 관광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촉진 등
- 법무부 등 : 외국 관광객 유치 지원문제 등

□ 調整經過

- '98. 9. 22, 사회문화조정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 조정회의 개최
- '98. 9. 24, " "

□ 調整結果

- 중국인 관광객의 사증발급시 사증발급절차를 간소화
- 콘도미니엄시설 확충을 위해 휴양콘도미니엄 여신규제 폐지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이자율, 원리금 상환 기간 등 융자제도 개선
-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의 면세점 이용제도 개선
-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외화획득 확대 지원
- 관광관련 업종의 중소기업 범위 확대
- 관광호텔 신축 활성화를 위한 상업차관 도입
- 관광호텔 사우나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관광호텔의 전력요금 인하로 호텔경영 여건 개선 지원 등

釜山아시아 競技大會 골프 乘馬競技場 建設支援

□ 推進背景

- 부산아시아 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와 대회 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골프경기장 및 승마경기장 건설이 필요하나
- 부산시의 경우 그린벨트 이외에는 골프장건설 부지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임

□ 爭點事項

- 건교부 : 그린벨트외의 공원 지역이나 기존시설을 활용토록 하되 불가시 그린벨트내 건설
- 부산시 : 부산시는 지역여건상 그린벨트 외의 부지 확보가 어려우며 기존시설의 경우 입지여건 및 코스난이도, 회원의 반발 등으로 경기장 신설 필요

□ 調整經過

- '98. 6. 9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98. 7. 23 " " "

□ 調整結果

-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에 합의·추진하되, 환경방향평가협의회 환경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함
- 5~6만평 규모의 승마경기장을 우선 건설하여 필수 2종목으로 대회를 개최토록하고 필요시 추가 확보 문제 재검토

□ 其他 特記事項

-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하여 그린벨트내 행위허가 승인 추진중

學校用地確保에 관한特例法 改正推進 調整

□ 推進背景

-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 3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공동주택·상가 등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 부과대상의 형평성 결여·기준의 불명확·부과절차의 어려움 의 이유로 시·도에서 조례제정을 기피하고 있어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동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동법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교육부와 건교부간에 이견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주요 개정안 (교육부)
 -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담자 : 분양받는자 ⇒ 사업시행자
 - 소규모 개별사업에는 학교용지 확보대신 학교시설 부담금을 부과
- ※ '99. 4. 12 교육부 국정개혁보고서 대통령께서 조속히 결론을 내리도록 지시

□ 爭點事項

- 교육부 : 학교용지 부담금은 성격이 개발부담금과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부과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일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
- 건교부 : 부담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분양 받는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담금 성질상 부당

□ 調整經過

- 99. 4. 27 사회문화조정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급 조정회의 개최
- 99. 6 ~ 7 교육문화심의관 주재로 관계부처과장급 실무협의회 개최 (5회)
- 99. 7. 22 사회문화조정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급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입법사항의 미비점을 대폭보완, 법개정을 추진

-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法 명칭을 변경”
 -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 학교용지및시설비확보에관한특례법
- 300~2,500세대 미만 개발사업에는 학교용지확보 대신 학교시설 부담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부담금 부과대상자는 현행대로 「분양받는자」에게 부과토록 하고
 -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학생유발 요인이 없는 상가는 제외하고, 공동주택은 면적에 관계없이 포함하여 형평성 확보
- 부과징수업무는 시·도지사가 직접 부과·징수 하되
 - 사업시행자가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분양공고하여 국민이 부담금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함
- 부담금 산정기준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명확히 정함
- 효율적인 부담금 징수를 위해 부담금 납부의 승계조항 및 강제징수 조항을 신설

□ 其他 特記事項

- 조정결과에 따라 교육부가 동법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9월중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상정, 정기국회 제출예정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發展方案 樹立 調整

□ 推進背景

- 정문연을 개편하여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국학진흥의 요람으로서 안정된 법적기반을 갖춘 『국립대학원대학』으로 개편추진 (교육부)

※ 주요 개선내용

- 학사조직 : 석사과정 60명→ 300명, 박사과정 60명→ 150명
- 교직원 신분처리 : 교원은 교육공무원(58명→105명), 관리직은 국가공무원(74명→77명)으로 특별채용
- 강의동, 국제관 및 기숙사, 도서관 등 신·개축 (200억원 소요)

□ 爭點事項

- 행자부 : 국립대학원으로 개편하면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정부의 감량화 정책 및 정부출연기관의 경영 혁신 계획에 상치
- 기획예산처 : 정문연을 국립대학으로 개편보다는 현 체제하에서 우수교육·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이 바람직

□ 調整經過

- 98. 10. 26 사회문화조정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급 조정회의 개최
- 98. 11. 4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장관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정문연에 대해 우선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편방안을 추진기로 함

□ 其他 特記事項

- 99. 3. 11 정문연을 “한국학연구중심 대학원으로 발전시키고,
시설확충을 위해 190억원 지원계획”을 교육부 “교육발전
5개년계획”에 포함하여 추진중

幼兒教育振興法施行令 改正推進 調整

□ 推進背景

- 동개정령안 입법예고사항 중
 - 유치원장은 “원아의 생활기록을 매년 3월말까지 초등학교에 통보하여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에 대해
 - 보육시설 및 사설학원 연합회 등 관련 단체에서 동내용 삭제를 요구하며 문제제기
-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책조정 필요성이 제기됨

□ 爭點事項

- 교육부, 유치원단체 : 학생지도 등 유치원 교육의 초등학교 연계를 위하여 원아생활기록을 초등학교에 통보 필요
- 보육시설, 사설학원 연합회 : 현재 유아교육은 유치원(26%), 보육시설(27%), 사설학원(47%)이 분담하여 교육하고 있는 현실에서유치원만 통보 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대두

□ 調整經過

- 99. 1. 21 교육문화심의관 주재로 교육부 담당과장, 한국학원총연합회 부회장 회의개최

□ 調整結果

- “유치원 원아의 생활기록부를 매년 3월말까지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는 유보 하기로 함

□ 其他 特記事項

- 조정결과에 따라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 개정시 동내용 삭제
(‘99. 4. 9 개정공포)

雇傭安定債券 販賣促進關聯 調整

□ 推進背景

-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의 재원조성 등을 위해 발행하는 ‘고용안정채권’의 판매부진으로 동 채권의 소화촉진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 爭點事項

- 채권판매수수료가 낮고, 자금출처조사 면제방침에 대한 의구심으로 판매부진
⇒ 채권판매수수료 상향조정, 수표로 채권매입시 이서를 생략하는 방안 등 관계부처 협조요청(노동부)

□ 調整經過

- ‘98. 4. 9 실업대책 관계차관회의시 협의
- ‘98. 4. 23 실업대책추진위원회의시 협의조정

□ 調整結果

- 채권판매수수료를 상향조정(0.2% → 0.25 ~ 0.45%)하고, 수표로 채권을 매입할 경우 이서를 생략토록 조정

國外就業活性化 推進關聯 調整

□ 推進背景

- 실업문제 완화를 위해 국외취업 활성화 계획을 추진중이었으나 국외취업알선의 업무수행체계와 관련하여 관계부처간 이견

□ 爭點事項

- 노 동 부 : 외교통상부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해외 취업알선업무 수행을 요청
- 외교통상부 : KOICA가 해외취업 알선업무를 담당할 경우 국내·외 취업알선업무가 이원화되어 업무효율성을 저해하므로 KOICA의 해외취업알선 업무수행을 반대

□ 調整經過

- '98. 5. 28 실업대책추진위원회시 협의
- '98. 6. 25 실업대책추진위원회시 조정

□ 調整結果

- KOICA에서 국외 구인업체 개발 및 협의 등 해외관련업무를 수행하고 노동부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자격자선발, 근로계약 체결지원 등 국내관련 업무를 수행토록하여 상호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토록 함

社會福祉業務 人力支援問題 調整

□ 推進背景

- 사회복지전문요원 3,000명을 지자체에 배치·운영중이나 전문요원이 미배치된 읍면동과 도시지역 빈곤계층 증가 등 업무수요증가로 총 1,700여명의 부족인력을 공공근로인력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사업시행주체 등과 관련하여 부처간 이견

□ 爭點事項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므로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일환으로 추진
- 행정자치부 : 복지부에서 실시중인 방문간호사업, 관련D/B 구축 등 유사사업의 예산을 전용하여 복지부 중앙부처 공공근로 사업으로 실시

□ 調整經過

- '99. 1. 13 실업대책실무위원회시 협의·조정

□ 調整結果

- 행정자치부가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업인력을 모집하여 실시키로 함

雇傭維持支援制度 擴充 調整

□ 推進背景

- '99년 상반기 실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감원대신 일시휴업, 휴직, 근로시간단축, 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확충·지원하여 실업자수를 최소화할 필요

□ 爭點事項

- 노동부 :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 및 기간을 상향조정
- | | 기존 | 개선 |
|--------|-------------|-----------|
| △ 지원수준 | 임금의 1/2~2/3 | 2/3 ~ 3/4 |
| △ 지원기간 | 6개월 | 8개월 |
- 재경부, 기획예산처 : 기업의 잉여인력을 보유토록 유도하여 구조조정을 저해하므로 기존의 지원수준을 유지

□ 調整經過

- '99. 1.13, 실업대책 실무위원회시 협의
- '99. 1.16, 실업대책 위원회시 협의.조정

□ 調整結果

-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은 기존대로 유지하고 지원기간은 노동부안대로 연장하되 '99년 상반기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조정

☐ 其他 特記事項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시행('99.2.1)

國民年金 擴大實施에 따른 公共勤勞人力支援 關聯 調整

□ 推進背景

-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지역 확대실시에 따라 동제도의 홍보, 가입권장 등을 위한 인력지원 필요성

□ 爭點事項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제도의 홍보를 위하여 실업대책 일환으로 공공근로인력 2만여명 수준을 투입할 필요
- 기획예산처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기금을 활용하여 홍보해야 할 사업으로 공공근로 인력투입 반대

□ 調整經過

- '99. 2. 26 실업대책위원회시 협의·조정

□ 調整結果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설명, 민원상담, 가입권장 등 대민밀착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12,000명 수준으로 공공근로인력을 투입기로 함

冬節期 日傭職 對策 및 日日就業센터 運營關聯 調整

□ 推進背景

- 일용직 대책으로 일용직 공공근로사업을 동절기('98.12~'99.2)에 한해 실시계획이었으나, '99.3월 사업중단으로 인한 일감의 급격한 감소문제가 대두되고 일일취업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처간의 이견으로 조정 필요

□ 爭點事項

- 일용직 공공근로사업을 3월에 일제히 중단할 경우 건설경기 불황과 급격한 일감감소로 일용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단계적으로 축소 및 일반공공근로사업으로 일부 흡수할 필요
-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일취업센터를 당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업무의 전문성 등의 문제로 행정자치부와 이견

□ 調整經過

- '99. 2.24, 4.2, 실업대책 실무위원회시 협의.조정
- '99. 3, 관계부처 합동 일일취업센터 운영실태 점검

□ 調整結果

- 일용직에 대하여 일반공공근로사업에 일부 연계하여 참여시키도록 하고, 일일취업센터는 일용직 대책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부에서 계속 운영기로 함.

女性家長 創業支援 追加財源 確報關聯 調整

□ 推進背景

-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여성가장의 창업시 점포를 임대하여 지원해 주는 동 사업의 호응이 높아 사업확대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방법과 관련하여 부처간 이견

□ 爭點事項

- 노동부 : 동사업의 규모확대(300 → 800억원 규모)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규모를 상향조정(5천억 → 5천5백억원)하여 재원조달
- 재경부, 예산청 : 당초 계획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채권발행(5천억원)을 통해 조성한 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확대시행(채권발행규모 상향조정에 반대)

□ 調整經過

- '99. 4. 14 실업대책실무위원회시 조정

□ 調整結果

- 근로복지공단의 채권(5천억원) 발행으로 조성된 실업자 대부분 사업 재원중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의 확대를 우선하여 추진토록 함

生活保護者 D/B 早期構築 關聯 調整

□ 推進背景

- 실업급여, 직업훈련, 공공근로, 생활보호 등 실업관련 D/B의 구축 및 연계를 통해 실업대책사업의 이중수혜를 방지

□ 爭點事項

- 노동부 : 실업대책사업의 이중수혜 방지를 위해서 생활보호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포함된 D/B를 1/4분기까지 조속히 구축할 필요
- 복지부 : 생활보호자 관련자료를 입력하는 지자체의 전산장비의 부족, 자료입력부서의 혼선 등을 이유로 조기에 D/B 구축이 곤란하다는 입장

□ 調整經過

- '99. 4.20, 실업대책기획평가단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

□ 調整結果

- '99. 4월말까지 생활보호 D/B를 구축기로 하며, 자료입력부서는 생활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과로 통일하고, 전산시설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관련 파일을 송부토록 하여 해결함.

□ 其他 特記事項

- 실업대책기획평가단에서 입력상황을 점검,독려하여 정상 추진

下半年 失業對策事業 推進方向 調整

□ 推進背景

- 하반기 실업대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최근의 경제여건변화와 이에 따른 고용전망을 토대로 하반기 실업대책추진방향 조정필요

□ 爭點事項

- 하반기 실업대책의 예산집행등 추진방향
- 하반기 공공근로 적정규모 및 상반기 이월예산 활용 방향
- 실업대책사업의 정규채용효과 제고 방안 등

□ 調整經過

- '99. 5. 하반기 추진방향 관련 관계부처 실무회의
- '99. 6. 실업대책실무위원회 보고

□ 調整結果

- 예산의 이월 등 합리적 집행
 - 경기회복에 따라 신청자 감소등으로 수요가 자연 감소되는 사업은 무리한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절약예산은 타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이월 등 합리적으로 집행
-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단계별 규모조정
 -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은 3·4단계에 각각 37만명씩을 투입하고,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상반기이월예산은 3·4단계에 균분하여 배정
- 실업대책사업의 정규채용연계 강화
 - 일정비율이상 채용 약속기업에 대한 인턴생 우선배정, 중소기업기술인력지원사업기간의 연장 등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강화 등

中央部處 公共勤勞事業 賃金單價 調整

□ 推進背景

- 각부처에서 공공근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임금단가의 재조정을 요구함에 따라 관계기관간의 의견조율

□ 爭點事項

- 행자부 : 현행지침상 임금단가 기준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임금단가의 변동에 따른 사업참여자 혼선을 방지
- 노동부 : 공공근로사업 임금단가를 업무성격, 노동강도, 작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반영
- 사업시행기관 : 노동강도, 업무성격등이 유사한 사업임에도 사업시행기관간 임금단가 격차로 인한 형평성 시비 및 불만소지 해소제기

□ 調整經過

- '99. 8 중양부처 공공근로사업 적정임금 실태점검
- '99. 8. 25 노동연구원 모니터링센터 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조정회의

□ 調整結果

- 중양부처 공공근로사업 임금단가 조정결과를 4단계 사업부터 수정 반영토록 조정
 - 단가인상 : 고속도로변환경정비사업(건교부), 전주기초보강 및 선로연변정비사업(철도청),
 - 단가인하 : 외교기록물정리지원사업(외교부), 국가기록물정리사업(행자부)

公共勤勞 對象者 選拔基準・方法 改善關聯 調整

□ 推進背景

- 기존 공공근로대상자 선발기준이 연령(30~55세)등에 치중하여 소득·재산·실업기간등의 고려가 미흡하고, 공공근로 DB의 구축미비로 공정·신속한 대상자 선정에 애로
 -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자의 사업참여로 인한 형평성 논란
 - 실업급여수급자 등의 중복수혜 및 불공정 선발

□ 爭點事項

- 행자부 : 선발요소별 가중치 부여
- 노동부 : 조속한 전국차원의 공공근로 D/B구축 필요

□ 調整經過

- '99. 5 관계부처 실무회의
- '99. 6 실무대책실무위원회 보고

□ 調整結果

- 공공근로대상자선발의 신뢰성·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소별 점수를 합산·선발하는 점수제 선발방식을 적용토록 조치
- 행자부, 복지부, 노동부 등으로 하여금 실업자 D/B정보를 조기 구축·활용토록 조치

中小企業人力支援事業 關聯 調整

□ 推進背景

-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등으로 사업참여기피 및 중도포기가 많고, 정규취업으로의 전환이 저조하며, 산업단지에 대한 중기청과 지자체의 2중인력지원에 따른 혼선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
 - 중기청 인력지원사업은 투입 9,473명 중 3,372명(36%)이 중도포기
 -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이 배정되지 않아 정규직 채용이 저조

□ 爭點事項

- 행자부 : 중도포기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방안,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근로 인력지원 개선
- 노동부 : 구인·구직자간 적성·기술·눈높이 등이 맞는 알선여건조성, 지원
- 중기청 : 3D업체 지원종료후 정규채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調整經過

- '99. 4. 28 ~ 5. 4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실태 점검
- '99. 5. 20 실업대책실무위원회 보고

□ 調整結果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3단계사업부터 지침을 개정, 반영시행토록 조정
 - 정당한 사유없는 중도포기자는 다음단계 사업참여 배제
 - 3D업체에 대한 2단계 연속참여 허용 및 사업주의 보너스임금 지급 유도, 정규채용업체에 대한 인력 추가지원
 - 만남의 장 및 복수추천·개별상담을 통한 적합한 인력배치
 - 산업단지는 중기청이, 기타지역은 지자체가 공공근로인력을 지원

限時生活保護事業 推進方向 調整

□ 推進背景

- 한시생활보호사업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업대책사업으로서의 취지를 살려 저소득 실직계층의 자활기반구축 지원 방안 모색 필요

□ 爭點事項

- 기존생보자와 한시생보자의 구별이 모호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자에 대한 공공근로, 직업훈련등 실업대책사업과의 연계미흡
- 시·도간 예산배정의 불균형, 사회복지전문인력 및 전산장비 부족등 시행상의 문제점 개선

□ 調整經過

- '99. 3월(3. 12~18) 관계부처 실무회의

□ 調整結果

- 기존 생보사업과 한시생보사업의 통합을 검토토록하고, 자활보호자에 대한 공공근로, 직업훈련등 타 실업대책사업과의 연계를 강화
- 실업률, 인구수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예산배정기준을 마련 시행
-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PC등 전산장비 지원 및 적정인원보강 등 추진

政府支援 인턴제 推進方向 調整

□ 推進背景

- 정부지원 인턴제의 정규채용연계를 강화하고 정규고용 위축가능성 등 시행과정에서의 부작용 최소화 방안 강구 필요

□ 爭點事項

- 정부지원인턴제의 정규채용 연계강화를 위한 방안
- 지역별 불균형배정, 정규채용위축 등 부작용 최소화 방안

□ 調整經過

- '99. 1, 3월 시행기관 및 사업장 등 현장점검
- '99. 4월, 6월 실업대책실무위원회 보고

□ 調整結果

- 정규채용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등에 대한 인턴배정을 축소하고, 정규채용 약속기업에 대한 우선배정 등을 추진토록 조정
- 대학별, 지역별 신청인원 및 실업률 등을 고려하여 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고, 인턴기간 중 정규채용기업의 경우 잔여기간을 계속 지원토록 하는 등 시행상의 미비점 개선·조정

職業訓練事業 活性化方案 調整

□ 推進背景

- 직업훈련사업의 취업률을 제고하고, 직업훈련수당 부정수급 등의 문제점 개선 필요

□ 爭點事項

- 직업훈련 수료자 취업률 제고 방안
- 국비무료훈련 확대실시에 따른 부작용 개선 방안
- 직업훈련비 부정수급 등 문제점 보완 방안

□ 調整經過

- '99. 5 관계부처 실무회의
- '99. 7 실업대책실무위원회 보고

□ 調整結果

- 재취업 연계강화
 - 직업훈련사업의 취업률제고를 위해 직업훈련카드제 실시등 수요자중심의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맞춤형훈련을 실시하는 제도 개선 추진
- 훈련비 지원방법 개선
 - 일부 고급과정의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을 도입하는 등 훈련비 지원방법을 개선하여 국비 무료 훈련확대에 따른 교육자세 이완 등 문제점 보완
- 지도점검 강화
 - 관인 출석부 사용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지도점검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도점검 강화

□ 水質改善企劃團 □

下水管渠 地方讓與金事業 支援比率 調整

□ 推進背景

- 환경부에서 '98년도 지방양여금 지자체 배정시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지원비율을 상향조정(10~30 → 30~70%)
-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 당초비율대로 환원하여 줄 것을 요구

□ 爭點事項

- 행자부 :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양여금지원비율 상향조정 필요
- 환경부 : 물관리종합대책상 하수관거 추진계획 달성을 위해 현행 지원비율 유지 필요

□ 調整經過

- '98. 2. 25 : 환경부 조정요청
- '98. 3. 27~31 : 관계기관 실무조정회의 및 차관간담회 개최
- '98. 4. 7 : 조정결과 시달(국무총리지시'98-4)

□ 調整結果

- '98년도에는 하수관거 지방양여금 지원비율은 당초비율대로 적용하여 하수관거 양여금 재배정
- 환경부 주관으로 하수관거 양여금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후,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

畜産糞尿 處理 및 資源化 對策

□ 推進背景

- 축산분뇨는 유용한 자원(퇴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반면, 안전하게 처리되지 않고 하천, 호소에 유입시에는 수질오염 영향이 큰 고농도 오염물질임
- 그간 정부에서는 축산폐수관리를 위하여 관련법규와 제도의 정비, 축산분뇨 자원화 시책, 시·군단위별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음

□ 爭點事項

- 환경보전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축산분뇨의 배출과 처리과정을 통합관리하는 제도적·기술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
 - 발생·수거단계부터 지역별 여건 및 자원화과정을 종합 고려한 관리체계가 요구됨

□ 調整經過

- 수질개선기획단에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대책 수립지침』을 농림부와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 시달('98. 7. 30)

□ 調整結果

- 수질개선기획단의 지침에 따라 '98. 12월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대책』을 마련

□ 其他 特記事項

-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대책』에 따라 환경친화적 축산업을 정착·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련기관별로 소관업무를 추진중에 있음

八堂湖 등 漢江水系上水源 水質管理特別對策 樹立

□ 推進背景

- 수도권 주민의 유일한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98년 4월 2ppm(BOD)까지 악화되어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관리특별대책』 수립·추진
- 팔당특별대책(안) 주요과제인 수변구역 지정, 보안림지정,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등에 대한 농림부 등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이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

□ 爭點事項

▲ 水邊區域 設定・管理

- 대책(안) : 특별대책지역 1km, 기타 상류지역 500m(북한강의 암담, 남한강 충주댐, 경안천 발원지까지)
 - 농림부 : 특별대책지역 300m, 기타 상류지역 200m로 축소
 - 경기도 : 환경기초시설 확충후 수질개선이 안될경우 수변구역을 설정하되 도지사와 사전협의
 - 강원도 : 오염실태, 지형 등 지역여건을 정밀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결정
 - 충북도 : 충주댐 까지를 댐하류인 양성面으로 조정

▲ 保安林 指定

- 대책(안) : 팔당호, 남·북한강 본류, 경안천 및 접속 1차지천의 발원지까지 5km 이내 산림

- 산림청 : 양안 2km이내 국·공유림으로 하되 1차지천 및 사유림 제외
- 경기도 : 보안림 지정자체를 반대
- 강원도 :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정 또는 본류 1km내 국유림만 지정
- 충북도 : 지정범위를 최소화하되 지자체 공공개발시 예외 인정

▲ 汚染總量制度 導入

- 대책(안) : 지자체별로 오염부하량 총량관리제도 실시, 허용총량 범위내에서 친환경적인 개발허용, 팔당특별대책지역 2002년 시범실시 및 2003년 지역확대
- 경기도 :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사업 완료후 시행하되 하수처리용량 범위내에서 개발허용
- 충북도 : 행정구역별 수질관리책임제도 도입

□ 調整經過

- '98.11.5, 부단장 주재 관계부처 국장 조정회의 개최
- '98.11.9,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調整結果

▲ 水邊區域 設定・管理

- 특별대책지역 1km, 기타상류지역 500m(북한강 의암댐, 남한강 충주 조정지댐, 경안천 발원지 하천구간 까지)로 하되, 지역여건, 토지이용실태 등을 공동조사후 광역단체장과 협의 후 지정
-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하수처리구역등은 제외

▲ 保安林 指定

- 팔당호, 남·북한강 본류, 경안천 및 접속 1차지천의 발원지까지 5km이내 산림중 국·공유림을 보안림으로 하되, 지형, 지질 등 지역실태를 공동조사후 광역단체장 및 수계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

▲ 汚染總量制度 導入

- 오염총량관리제를 2002년부터 년차적으로 확대 실시
 -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대책 강구

□ 其他 特記事項

- 조정결과에 따라 “팔당호등한강수계상수원수질관리특별대책”확정('98. 11. 20) 및 1급수 개선을 위해 특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지시(국무총리지시 98-31호, '98. 11.25)
- 수변구역 지정, 총량관리제도 등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정·공포 ('99. 2. 8)

八堂特別對策 財源調達 方案

□ 推進背景

- 「팔당호등한강수계수질개선특별대책('98~2005)」 추진을 위해 총 2조 6,385억원 소요
 - 이중 5,437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적으로는 5조원의 양여금부족 전망

□ 爭點事項

- 환경부
 - 팔당특별대책 수립을 계기로 물관리종합대책의 전체적인 부족재원에 대한 조달방안 마련 필요
 - 제1안 : 지방양여금의 도로·수질간 배분비율 조정
 - 제2안 : 주세의 지방양여금전입비율 상향조정
- 행정자치부
 - 한강수계대책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만 조달방안 마련
 - 부족재원은 국고지원 또는 수계간 배분비율 조정을 통해 환경부에서 자체 조달
- 기획예산처
 - 한강수계대책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만 조달방안 마련
 - 지방양여금중 도로·수질간 배분비율 조정을 통해 조달

□ 調整經過

- '98. 8. 7 : 팔당특별대책 보고(환경부)
- '98. 8. 10~11. 19 : 실무조정회의 6회 개최
- '98. 8. 20~11. 9 : 관계부처 차관회의 3회 개최
- '98. 11. 20 :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심의·확정

□ 調整結果

- 전국부족분에 대해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되 공동부담원칙에 따라 다각적인 조달방안 추진
 - 물관리종합대책의 투자계획 약 3조원 축소조정
 - 지방양여금 수질오염방지사업 배분비율 상향조정
 - 2000년 24.5%에서 2003년 30%로 연차적 상향조정
 - 농특세의 수질개선지방양여금 전입비율 상향조정
 - 현행 19/150에서 2000년부터 23/150으로 상향조정
 - 2000~2005년중 매년 300억원씩 총 1,800억원 국고 지원

□ 向後 措置事項

- '98.11월 확정된 재원조달방안의 시행을 위해 '99년중 지방양여금법 개정 필요(행정자치부)

“環境技術開發및調整에關한法律改正法律(案)” 改正關聯

□ 推進背景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한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간의 이견사항에 대한 의견 조정

□ 爭點事項

- 환경기술개발계획 수립·추진과 관련하여
 - 환경부는 기술개발계획은 주무부처(환경부)에서 수립하고, 기술개발은 소관부처별 추진을 주장
 - 산업자원부는 각 소관부처별로 기술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을 주장
- 『환경기술평가』 및 『국제공동연구촉진』 추진 주체관련
 - 환경부는 주무부처에서 추진을, 산업자원부는 소관부처별 추진을 주장

□ 調整經過

- '98. 5. 28 입법예고후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3차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미합의되어 '98. 9. 23. 수질개선기획단에 이견조정을 요청
- 수질개선기획단에서 3차례(10.1, 10.20, 11.21)에 걸쳐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조정, 관련부처에 통보('98. 12. 3)

□ 調整結果

- 환경기술개발계획 수립추진 관련사항
 - 기술개발계획은 환경부가 각 소관부처 부문별 계획을 종합, 과학기술장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확정토록 함
- 환경기술평가, 국제공동연구촉진, 자금지원 등 개발사업 추진은 각 소관부처별로 추진토록 함

□ 其他 特記事項

- 조정결과를 법률개정안에 반영하여 정기국회에 상정예정

龍潭댐 水質保全 및 費用負擔 方案

□ 推進背景

- 2001년 담수를 목표로 용담댐을 건설중이나 상류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비용부담에 대한 기관간 이견으로 지연
- '98년도 국무조정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용담댐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기능 수행 권고

□ 爭點事項

-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계획
 - 하수처리장 3개소등 환경기초시설 건설에 561억원 투자계획
 - 동 투자계획에 대해 '92년 용담댐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협의조건대로 투자소요 전액 댐사업자(국고)가 부담필요
- 관계부처 의견
 -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대로 댐사업자 부담필요
 - 건교부 : 댐사업비에 포함하되 수공부담으로 추진코자 하나, 예산심의과정에서 미반영
 - 예산청
 - 환경기초시설 건설사업은 지방양여금사업이므로 용담댐상류 환경기초시설도 양여금으로 추진함이 바람직
 - 댐사업비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은 현행법상 곤란

□ 調整經過

- '98. 9. 30 : 건교부 조정요청
- '98. 11. 24 : 관계기관 1차 조정회의 개최
- '98. 12. 9 : 관계기관 2차 조정회의 개최
- '98. 12. 20 : 조정결과 및 수질보전대책 수립지침 시달

□ 調整結果

- 용담댐유역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
 - '99.9월까지 용담댐유역에 대해 전문가에 의한 보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
-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조달방안
 - 환경기초시설은 환경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원비율은 현행 지원비율 적용(양여금 70%)
 - 지방비는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에 의해 물이용부담금을 도입하여 하류 시군도 부담
 - ※ 용담댐관련 지방비는 '99예산에 반영된 증액교부금 30억원으로 충당
 - 하수처리장의 조기완공을 위해 진안은 '99년도 공공자금융자지원, 장수는 '99예산에 설계비 반영 및 2000년 양여금예산에 공사비 반영(환경부)

沿岸管理法 制定關聯

□ 推進背景

- 연안관리법 제정과 관련하여 연안의 육지부에서의 환경보전 기능 업무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이견·대립
- 연안관리법 제정목적
 - 연안을 종합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바람직한 연안상 정립 및 연안자원의 합리적 배분, 연안 환경보전 도모(9개부처 50여개 개별법에 의해 분산·이용 개발)

□ 沿岸管理 領域

- 연안 해역 :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12해리의 바다와 바닷가
- 연안 육역 : 무인도서와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육지부 500m 이내

□ 爭點事項

- ① 환경관련법상 환경관련 보전지역의 동법 배제 여부
- ② 환경관련법상 신규 환경관련 보전지역지정 및 환경관련 계획의 동법 준수 여부
- ③ 연안통합계획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여부
- ④ 법 목적조항에 ‘연안환경보전’ 용어사용 여부

□ 調整經過

- 98. 8.31 1차 부단장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
- 98. 9. 3 2차 부단장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

□ 調整結果

- ① 연안통합계획에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 환경관련보전지역 포함
- ② 환경관련 법규정에 따른 변경내용 등은 연안관리법에 의한 통합계획에 당연 반영기로 함
- ③ 연안통합계획의 최종심의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환경보전 위원회로 변경
- ④ 법 목적조항에 ‘연안환경보전’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

□ 其他 特技事項

- 연안관리법 제정·공포('99. 2. 8, 해양수산부)

華甕湖 水質保全 및 費用負擔 方案

□ 推進背景

- 2001년 완공을 목표로 화옹호방조제 건설중이나, 상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부담에 대해 기관간 이견으로 설치지연

※ 화옹호 간척사업 개요

- 위 치 : 경기도 화성군 우정·장안·남양면
- 매립 및 유역면적 : 매립면적 6,212ha, 유역면적 23,580ha
- 총사업비 : 3,256억원(농지관리기금 100%)

□ 爭點事項

- 경기도 환경기초시설 건설계획
 - 화옹호 상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하수처리장등 530억원투자
 - 양여금 조기지원 및 지방비부담분의 농지관리기금 지원 필요

<경기도 환경기초시설 건설계획>

구 분	사업기간	시설용량	총사업비(지방비)
하수처리장(2개소)	2001-2004	31,000톤/일	513억원(154)
마을하수도(5개소)	2000-2001	845톤/일	17억원(5)

○ 관계부처 의견

- 농림부 : 지방비 부담분의 농지관리기금 지원은 곤란
- 환경부 : 환경기초시설의 건설 필요성에 대해 검토 필요

□ 調整經過

- '99. 1. 8 : 경기도 조기지원 건의(경기도지사 지휘보고)
- '99. 2. 25 : 관계기관 조정회의 개최
- '99. 3. 23 : 조정결과 시달

□ 調整結果

가. 水質汚染防止對策 樹立

- 농진공에서 '99.9월말까지 기본조사 실시
 - 생활하수 외해방류 등 기존계획 이외에 경기도가 요구한 환경기초시설을 포함하여 종합 검토
- 환경부에서 '99.12월말까지 종합대책을 확정·추진
 - 경기도 주관으로 「화옹호 수질보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본조사계획, 종합대책수립 및 추진방안등을 협의하여 건의

나. 費用負擔原則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는 현행대로 환경부의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원
 - 지방양여금 70%, 지방비 30%(경기도 15%, 화성군 15%)
- 하수처리장 조기 착공을 위한 선투자, 민자유치 등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하여 추후 논의

壓縮天然가스(CNG)버스 운행 및 充塡所 設置

□ 推進背景

- 도시대기질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하여 기존경유사용 시내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버스로 교체추진 및 차고지내 압축천연가스(CNG)충전소 설치추진과 관련하여 산자부 등 관계부처 이견으로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 됨.

□ 爭點事項

- 부천시 LPG충전소 폭발사고('98.9)후 “주택가에 산재한 가스충전소를 도심밖이나 안전지대로 이전”하도록 대통령지시('98. 9.15)
 - 산업자원부 : 도심지내 기존 가스충전소를 년차적으로 市외 광지역으로 이전 추진
 - 건설교통부 : 일반주거지역 등 5개지역에 가스충전소 설치를 제한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추진
 - 환경부 및 서울시 : 시내버스 차고지내 CNG충전소설치 불가시 천연가스 버스보급 차질, 시내버스 차고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 허용
 - ※ 차고지 70%이상이 설치제한지역에 위치

□ 調整經過

- '99. 1. 14, 부단장 주재 관계부처 국장 조정회의 개최
- '99. 1.22,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調整結果

- 가스사고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가스충전소의 도심지역 설치제한 및 시외곽 안전지대로 이전하는 기본정책 유지
- 대도시 대기질개선을 위해 경유사용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버스 교체사업도 추진 함
 - 부지면적이 넓어 안전거리가 확보되는 경우의 버스차고지에는 버스전용가스(CNG 및 LPG)충전소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설정하여 안전성 확보

□ 其他 特記事項

- 조정결과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건축법시행령 개정 공포('99. 4. 30)

새만금 干拓事業 環境影響 共同調查團 構成・運營

□ 推進背景

- 새만금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
 - 개발면적 : 40,100ha
 - 사업기간 : 1991년~2004년
 - 총사업비 : 17,507억원 ('99까지 10,251억원 투입)
- 환경영향 공동조사 추진배경
 - '96년 시화호 오염문제를 계기로 환경단체, 일부언론 등에서 새만금호의 수질악화 및 제2시화호 가능성 제기

□ 爭點事項

- 새만금 간척사업 시행에 따른 해양환경 및 수질오염, 갯벌생태계 파괴 등 환경영향 및 경제성에 대한 문제
 - 전라북도에서 민·관 공동조사 건의('99. 1. 4)
 - 환경단체에서 민·관 공동조사, 새만금사업 전면중단 또는 백지화 요구

□ 調整經過

- 수질개선기획단 주관으로 관계국장회의 3회('99.1.16, 2.6, 3.30),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2회('99.3.17, 4.13)와 관계차관회의('99.4.19)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 調整結果

- '99. 4. 22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계획을 확정하여 공동조사를 추진중
 - 조사기간 : '99. 5~2000. 4 (1년간)
 - 조사단 구성 : 총 30명
(민간전문가 21명, 정부 담당국장등 9명)
- 공동조사단에서는 환경영향, 경제성,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 등 타당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 연구, 평가하여 필요한 대책을 정부에 건의

□ 其他 特記事項

- 정부에서는 2000년 상반기중 공동조사단의 건의내용을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 추진
 - 정부의 대책(안)을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와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견수렴후 확정 예정

上・下水道料金 現實化 推進

□ 推進背景

- '99년도 물관리종합대책 수립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의 연차별 추진목표 설정에 대해 관계기관간 이견

□ 爭點事項

- 환경부 추진계획(안)
 - 물수요관리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표현을 위해 목표현실화율을 제시
- 재정부 의견
 - 물가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연차별 목표현실화율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調整經過

- '99. 4. 17 :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개최

□ 調整結果

- 물수요관리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표현을 위해 목표현실화율을 제시하되, 목표수준 하향조정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상수도 요금(%)	77	환경부(안)	조정	환경부(안)	조정	환경부(안)	조정
		90	80~85	95	90~95	100	100
하수도 요금(%)	53	75	75	90	75	100	100

물 관리 情報化 推進對策

□ 推進背景

- 「물관리종합대책('96~2011)」에 따라 부처공동으로 「물관리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키로 결정
- 기본계획 수립관련 물관리정보화 추진방향에 대해 기관간 이견
 - 물관리정보화 중계DB구축 필요성 및 전담기관
 - 수량·수질통합시스템 구축필요성 및 전담기관
 - 기관간 물관리정보통신망 구축방향
 - 기초조사 관련 역할분담 체계

□ 爭點事項

- 행정자치부
 - 행자부에서 물관리정보중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수량·수질을 통합한 통합중계DB 구축
 - 기관간 정보통신망은 행자부의 국가지방행정망 이용
- 건설교통부
 - 행자부의 중계시스템은 기관간 물관리정보의 중계기능만 수행하고, 통합DB의 구축은 건교부가 담당
 - 부처별 개별정보화를 원칙으로 하되 건교부에서 상위통합시스템 구축
 - 물관리기초조사는 각 부처별 업무소관에 따라 각각 추진

○ 환경부

- 수질모델링을 위해 소하천의 유량조사자료 필요시 환경부에서 독자적인 조사추진 필요

○ 정보통신부

- 물관리정보중계시스템은 불필요하며, 기관간 정보통신망은 초고속국가망을 이용함이 바람직

□ 調整經過

- '98. 1 ~ '99. 4월 : 부처실무회의 7회 개최
- '99. 5. 7 : 민간전문가 간담회 개최
- '99. 6. 21 : 물관리정보화 기본계획(안) 관계기관 서면협의
- '99. 7. 6 :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개최

□ 調整結果

- 행자부의 중계시스템은 물관리정보의 중계기능만 담당
- 건교부와 환경부가 각각 수량, 수질에 대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교부에 Clearing House 구축
 - 각 기관은 소관업무에 대해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초조사 추진
- 중앙부처간 정보통신은 행자부의 중계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기타 통신망은 부처별로 자체 구축

□ 向後 措置事項

- 협의·조정된 물관리정보화 기본계획(안)을 차기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 필요

寧越댐 建設 妥當性 綜合檢討를 위한 共同調査團 構成・運營

□ 推進背景

○ 영월댐 사업개요

- 위 치 : 강원도 영월군 남한강 상류
- 총 저수용량 : 698백만톤(댐높이 98m)
- 사업기간 : 1996년 ~ 2002년('97까지 실시설계 및 댐건설에
정지 지정 고시)
- 총사업비 : 9,390억원

○ 건설타당성 공동조사 추진배경

- 수도권 홍수조절 및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건설예정인 영월댐에 대하여 환경단체 등에서 환경파괴를 이유로 댐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등 소모적인 찬반논쟁이 장기화

□ 爭點事項

- 환경단체 등에서 영월댐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자연생태계 훼손, 석회암지역의 댐안전성 우려, 장래 물수요의 과다추정 주장 및 한강수계 홍수조절능력에 대해 문제점 제기

□ 調整經過

- 댐건설 관련부처가 아닌 수질개선기획단 주관으로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99.7.6, '99.8.24) 및 「물관리정책실무조정회의」('99.8.26)를 거쳐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객관적인 재조사 추진

□ 調整結果

- '99.9월 부터 영월댐 건설 타당성 종합검토를 위한 공동조사단 구성·운영
 - 조사기간 : '99.9~2000.2(6개월간)
 - 조사단 구성 : 총 34명(조사단장 : 박원훈 물관리정책민간위원장)
5개 분과(물수급 6, 홍수 8, 댐안전 6, 환경 8, 문화 5)

□ 其他 特記事項

- 공동조사단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연구·평가하여 필요한 대책을 정부에 건의
- 정부에서는 2000년 상반기중 공동조사단의 건의내용을 검토하여 영월댐 건설여부를 결정